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14
2014. 3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4.2.1~2.28)

건축문화 부문

- 국토부, 국내 공간정보 SW산업 적극 육성
- 서울시, 시민들과 건축을 주제로 대화하는 아카데미 운영
- 서울디자인재단, DDP시민소통프로그램 '봄장' 개최
- 부산시, 제2회 창조와 재생 아카데미 개최
- 2014 전국 옥상·베란다 텃밭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제1회 한·영 녹색건축포럼 개최
- 브이월드 서비스, 이제 손안에서 즐긴다
- 독도, 동해까지 우리나라 영토 현황을 '한 눈에'
- 손 안에 보물지도 '인천시 지도포털' 서비스 시작
- 서울시, 공공데이터 쉽게 풀어주는 '데이터 시각화' 개시
- 한양도성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서울 한양도성 가이드북'
- 특별한 서울 도보여행, '도성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투어'

녹색 건축·도시 부문

-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본격 시행
-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 확충에 적극 나서
- 고층건축물, 품질·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 광주시 탄소배출지도 나왔다
- 짙고 해 뜰 날! 경기도 햇살하우징 강화
- 저탄소 녹색생활의 체험·교육의 장
- 경북도, U-City 건설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자연·문화자원 활용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 힐링 도시숲 전국에 446개소 조성
-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축제, 3월 광주에서 열린다
- 광주시, 서민 주거복지에 주력
- 목포 북항에 생태숲 조성 국비로 추진
- 도시 내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조성 확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가꾸기에 1,260억 원 지원
- 서울시, 전국 최초 의료안심주택 222세대 이달 첫 삽
- 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MWM City)
- 여수엑스포장,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로 조성
- 중부권 마리나 항만 개발 밑그림 그린다
-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 마련
- 도심 유휴·방치공간, '물의 정원'으로 바뀐다
- 서울시, 건설공사 계획부터 관리까지 체계화 한 매뉴얼 발간
-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활용될 기법과 모델 제시
- 서울시, 마을에서 활동 할 조경리더 309명 양성
- 뉴타운을 넘어 지역발전 연계한 '도시주거재생'으로
-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 '아산 환영의 길' 등 공공디자인 공모 선정

해외 건축정책 동향

네덜란드 제4차 건축정책(2005~2008)

(auri)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4년 3월호 (통권 14호)

-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4. 3. 31
 - 발행인 : 제해성
 - ISS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건축도시분야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정책 Updates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hr/>		
건축문화 부문	8	국토부, 국내 공간정보 SW산업 적극 육성
	8	서울시, 시민들과 건축을 주제로 대화하는 아카데미 운영
	8	서울디자인재단, DDP시민소통프로그램 '봄장' 개최
	9	부산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 지정 시민공청회
	10	부산시, 제2회 창조와 재생 아카데미 개최
	10	2014 전국 옥상·베란다 텃밭 디자인 공모전 개최
	11	제1회 한·영 녹색건축포럼 개최
	11	브이월드 서비스, 이제 손안에서 즐긴다
	12	독도, 동해까지 우리나라 영토 현황을 '한 눈에'
	12	부산, 젊은이들의 열기가 넘치는 곳 CATs, 꿈광광624
	13	손 안에 보물지도 '인천시 지도포털' 서비스 시작
	13	서울시, 공공데이터 쉽게 풀어주는 '데이터 시각화' 개시
	14	한양도성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서울 한양도성 가이드북'
	16	특별한 서울 도보여행, '도성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투어'
<hr/>		
녹색건축·도시 부문	17	경기도, 2014년 옥상녹화 대상지 공모
	17	자연과 경관이 어우러진 누리길을 누려
	18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본격 시행!
	19	2014년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20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21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 확충에 적극 나서
	22	고층건축물, 품질·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23	광주시 탄소배출지도 나왔다
	24	서울시, 「알기 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발간
	24	뽕하고 해 뜰 날! 경기도 햇살하우징 강화
	25	광주시, 저소득층 형광등 led로 무료 교체
	26	저탄소 녹색생활의 체험·교육의 장
	26	경북도, U-City 건설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6	해외건설시장 '최신 인프라 정책·정보', 이곳에서 한 눈에!
	27	자연·문화자원 활용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28	힐링 도시숲 전국에 446개소 조성
	28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축제, 3월 광주에서 열린다.
	29	서울시, 건설공사 계획부터 관리까지 체계화 한 매뉴얼 발간
	30	광주시, 서민 주거복지에 주력
	30	목포 북항에 생태숲 조성 국비로 추진
	31	도시 내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조성 확대
<hr/>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32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가꾸기에 1,260억 원 지원
	33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연구기관 등에 재정 지원 추진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33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34 서울시, 전국 최초 '의료안심주택' 222세대 이달 첫 삽
- 35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 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 35 대구시, 국가 R&D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 36 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MMM City)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37 광주광역시, 고양시에 행복주택 건설추진
- 38 여수 엑스포장,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로 조성
- 38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39 대구 도시경관 '조망점' 설치, 시민의견 수렴
- 39 토지관련 민원 해결 될 것이다!
- 40 울산시, 명품 디자인 도시 청사진 밝혀
- 40 공간정보기술,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다
- 41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및 지원시설부지 행복주택 건설 지원 확정
- 42 인천광역시 행복주택 2,450호 건설추진
- 43 중부권 마리나항만 개발 밑그림 그린다
- 43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 마련
- 46 도심 유희·방치공간, '물의 정원'으로 바뀐다
- 46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47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사업계획 확정
- 48 '공공디자인 명품' 충남 조성 본격 추진
- 48 서울시, 건설공사 계획부터 관리까지 체계화한 매뉴얼 발간
- 49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가 쉬워진다
- 50 서울시,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주택개량·신축 지원
- 50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활용될 기법과 모델 제시
- 51 환황해권 도시재생 성공모델 도입 추진
- 52 대전시 도시재생사업 사람장소 중심으로
- 52 13일 창신·송인지역 도시재생 선도구역 신청 위한 공청회
- 53 대전시, 시민 주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53 뉴타운을 넘어 지역발전 연계한 '도시주거재생'으로
- 54 이제는 옥외광고물도 관광 상품!
- 55 서울시, 여성안전아파트 등 '여성 안전마을' 18곳 운영
- 56 광주시,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공모 선정
- 57 서울시, 마을에서 활동 할 조경리더 309명 양성
- 57 부산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 58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업무처리 만전
- 58 '디자인을 통한 안전한 부산 만들기' 부산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 59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 61 '아산 환영의 길' 등 공공디자인 공모 선정
- 61 울산시, 걷고 싶은 보행도시 조성
- 62 대구광역시, 아산시에도 행복주택 공급된다

해외 건축정책 동향

- 64 네덜란드 제4차 건축정책(2005~2008)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2014년 2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3개 지자체에서 '건축문화 부문'과 관련한 사업 및 시책 24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월 12일, 바이월드 모바일서비스(iOS 및 안드로이드)를 오픈하여 누구나 인터넷 기반과 관계없이 바이월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2017년까지 전국 84개 도시의 3차원 지도 및 실내공간정보를 추가 오픈하고 문화재정보 등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적극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인 '제1회 한·영 녹색건축포럼'을 개최하여 그린리모델링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DDP 시민소통프로그램 - 봄장'을 개최, '입는 한글', '청년 푸드 디자이너 음식열전', '스트리트 퍼니처 전시「동대문 가가(街家)」'의 세 가지 테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항공사진·지적도 등을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천시 지도포털' 서비스를 2월 1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및 8개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및 시책 21건 대해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에 선정된 17개 사업자와 건축주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고층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구조규칙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에서는 도시생태계의 건강을 확보하고 도시민에게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로 조성된 '자연마당'을 2017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및 11개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및 시책 44건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도시재생R&D 연구 성과 발표 및 각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야 간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산책길, 공원, 실외체육시설 등 여가문화 조성 확대에 1,2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자의 응급상황을 현관이나 화장실을 일정시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감지기가 자동으로 감지해 신속하게 의료구조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심주택'이 서울의료원 맞은편에 2015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이달 중 착공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오는 9월까지 중부권 마리나항만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국가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충청남도 마리나 항만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을 비롯한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4년 2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건축도시 관련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79건의 발표자료 중 중앙부처에서 24건(30.4%), 지방자치단체에서 55건(69.6%)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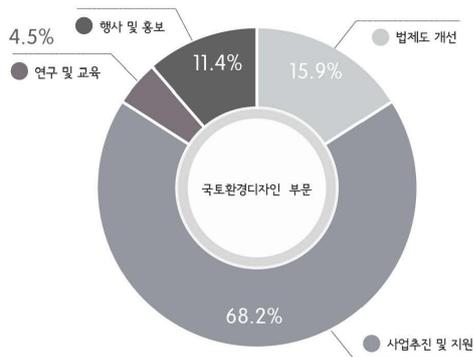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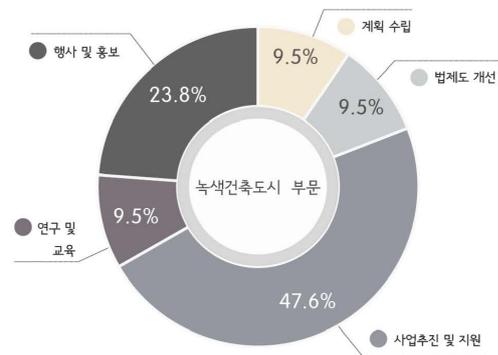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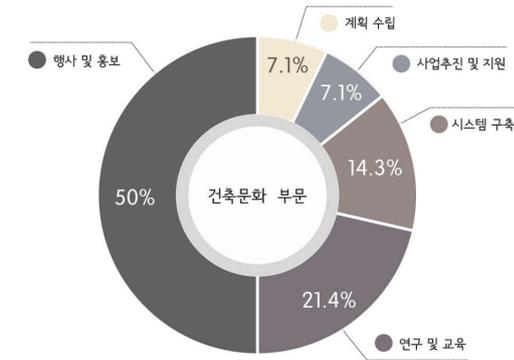


중앙부처에서는 전체 24건의 정책사업 중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주요 사업 및 시책이 13(16.5%)건으로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중점 발표하였으며,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활용될 기법과 모델 제시’, ‘공간정보기술,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등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 뉴타운을 넘어 지역발전 연계한 도시 주거재생으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5건의 주요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가장 많은 정책 사업을 발표한 부문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으로 31(39.2%)건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한 것으로 정리된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 부문	국토환경 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4(5.1%)	5(6.3%)	12(15.2%)	21(26.6%)
안전행정부	-	-	1(1.3%)	1(1.3%)
환경부	-	2(2.5%)	-	2(2.5%)
합계 (중앙부처)	4(5.1%)	7(8.9%)	13(16.5%)	24(30.4%)
지방자치단체	10(12.7%)	14(17.7%)	31(39.2%)	55(69.6%)
강원도청	-	-	1(1.3%)	1(1.3%)
경기도청	-	2(2.5%)	-	2(2.5%)
경남도청	-	1(1.3%)	1(1.3%)	2(2.5%)
경북도청	-	1(1.3%)	-	1(1.3%)
광주광역시	-	4(5.1%)	2(2.5%)	6(7.6%)
대구광역시	-	-	4(5.1%)	4(5.1%)
대전광역시	-	-	2(2.5%)	2(2.5%)
부산광역시	4(5.1%)	1(1.3%)	2(2.5%)	7(8.9%)
서울특별시	5(6.3%)	2(2.5%)	7(8.9%)	14(17.7%)
울산광역시	-	-	2(2.5%)	2(2.5%)
인천광역시	1(1.3%)	1(1.3%)	3(3.8%)	5(6.3%)
전남도청	-	2(2.5%)	1(1.3%)	3(3.8%)
제주도청	-	-	1(1.3%)	1(1.3%)
충남도청	-	-	5(6.3%)	5(6.3%)
합계 (지방자치단체)	10(12.7%)	14(17.7%)	31(39.2%)	55(69.6%)
총 계	14(17.7%)	21(26.9%)	44(55.7%)	79(1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각 부문별 세부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 사업이 전체 79건 중 44건(55.7%)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법·제도개선’ 분야 7건(8.9%),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30건(38%), ‘연구 및 교육’ 분야 2건(2.5%), ‘행사 및 홍보’ 분야 5건(6.3%) 발표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21건(26.6%)의 정책 사업이 발표되었으며,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연구 및 교육’ 분야 각각 2건(2.5%),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10건(12.7%), ‘행사 및 홍보’ 분야 7건(8.9%)으로 총 21건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2014년 2월 한 달간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분야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로 총 41건(51.9%)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행사 및 홍보’ 분야 17건(8.9%), ‘법·제도 개선’ 분야 9건(11.4%)으로 정리된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1(1.3%)	2(2.5%)	-	3(3.8%)
법·제도 개선	-	2(2.5%)	7(8.9%)	9(11.4%)
사업추진 및 지원	1(1.3%)	10(12.7%)	30(38%)	41(51.9%)
시스템 구축	2(2.5%)	-	-	2(2.5%)
연구 및 교육	3(3.8%)	2(2.5%)	2(2.5%)	7(8.9%)
행사 및 홍보	7(8.9%)	5(6.3%)	5(6.3%)	17(21.5%)
총 합계	14(17.7%)	21(26.6%)	44(55.7%)	79(1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국토부, 국내 공간정보 SW산업 적극 육성 국회사 2월 4일 '테스트베드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김재원 의원)와 공동으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성과보고회를 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앞으로 공간정보 SW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업체가 정부에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이번 테스트베드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기존 외국산 SW(Oracle과 ArcSDE엔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SW개발역량을 평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공간정보 SW의 품질인증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번 테스트베드 운영 성과물은 품질인증 세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SW의 표준모델 개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표준모델을 사용한 공간정보SW는 품질인증 후 내년부터 교체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설치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단계적으로 국산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공간정보 SW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축적된 공간정보 SW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03.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서울시, 시민들과 건축을 주제로 대화하는 아카데미 운영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축과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14년 건축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한다.

서울건축포럼에서 주관하는 건축아카데미는 건축의 공공성과 역사의 흔적을 잘 보존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축을 중심으로 인문학적 이해를 돕는 강좌로 구성하였다.

교육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 11강좌이며, 송효상, 김인철, 서현, 안창모, 조환 등 유명한 건축가와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딱딱한 건축 이론이 아니라 재밌는 주제로 알기 쉽게 건축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 교육의 수강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19일(수)까지 서울건축포럼 e-메일(seoularchforum@gmail.com)로 신청한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 청사 8층 다목적홀 및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축과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계기가 되고, 건축을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14.02.05.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서울디자인재단, DDP시민소통프로그램 '봄장' 개최 한글, 음식, 건축 등 3가지 테마의 콘텐츠 선보여

서울디자인재단은 2월 7일~8일 2일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간수전시장(구 이벤트홀)에서 「DDP 시민소통프로그램 '봄장」을 개최한다.

DDP 시민소통프로그램 ‘봄장’은 2012년부터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열어온 장터이다. 그 동안 봄장에서는 돈 없이 물건과 재능을 교환하는 ‘노머니장’, 이야기와 메시지를 나누는 ‘이야기장’, 정성을 다한 음식을 나누는 ‘맛장’ 등 매년 새로운 테마와 형식으로 시민들의 참여의 장을 열었다.

이번 봄장은 세 가지 테마로 우리글 ‘한글’, 새로운 콘셉트의 ‘야외음식’,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주제로 준비하였다.

〈입는 한글〉 만화, 그래픽티, 회화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팝아트작가 등 전 방위의 시각예술가 100인이 참여한 한글티셔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청년 푸드 디자이너 음식열전〉 ‘DDP 봄장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라는 주제로, 청년요리사(25~39세)들의 조리 노하우와 콘셉트가 녹아든 새로운 야외용 음식 만들기에 도전하는 요리대회

〈스트리트 퍼니처 전시 ‘동대문 가가(街家)’〉 국내 최고의 젊은 건축가 4인을 협력 건축가로 구성하여 DDP와 어울리면서 시민과 이용자를 위한 스트리트 퍼니처 전시

2014.02.05.

..... 서울디자인재단 DDP협력본부

부산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 지정 시민공청회

원도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등

부산시는 2월11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마을활동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 지정 신청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사업은 우리 시가 주도해서 제정한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국에 11개소(도시경제기반형 2개소+근린생활형 9개소)를 선정하게 되며, 3월까지 지정 신청을 받아 4월까지 선정을 하게 된다.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 1개소 당 500억 원(국비 250억 원), 근린생활형 사업의 경우 1개소 당 200억 원(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017년까지 4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도시재생 특별법’이 부산시가 주도해 제정된 만큼 도시재생 선도지역 2개소(경제기반형 1개소, 근린생활형 1개소)지정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민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부산 원도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석환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서의택 부산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김경수 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산업연구실장, 임기규 부산시 도시재생과장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발표되는 ‘부산 원도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은 부산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 및 ‘부산역세권 개발’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공청회시 제시되는 부산 원도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은 부산 원도심 일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부산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부산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국가 핵심시설(철도·항만 등)과 연계,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 도시재생대학’운동을 위해 부산시, 부산디자인센터, 경성대학교간의 업



무협약을 검토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4.02.07.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

부산시, 제2회 창조와 재생 아카데미 개최

도시재생의 이해와 새로운 발상 모색

부산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을활동가, 시민,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창조와 재생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창조와 재생 아카데미'는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인 '도시재생마을 창조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돼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계층의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 8회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창조도시 꾸리지바에서 배우다' 첫 특강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는 조갑상 교수(경성대 국어국문학과)가 '소설로 읽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근대도시로 가는 길의 풍경들 △동래온천과 해운대 바다 △낙동강 역사와 문화지도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강연에 참석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www.busanmae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 양성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지방자치, 문화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구성하는 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새로운 발상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2.07.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2014 전국 옥상·베란다 텃밭 디자인 공모전 개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텃밭디자인 공모를 통해 도시농업 저변확산 기여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는 옥상과 베란다 등 생활공간 나에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텃밭디자인 공모를 통해 도시농업의 저변확산에 기여하고자 '2014년 전국 옥상·베란다 텃밭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심 속 농업활동 및 힐링 공간으로서 옥상과 베란다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자투리 공간을 다양한 형태의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텃밭 보급을 위해 다양한 소재 발굴과 시민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는 옥상텃밭, 베란다텃밭 2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옥상텃밭 분야는 옥상이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작물생육이 용이한 구조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활동 공간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적용이나 보급이 가능한 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베란다텃밭은 베란다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작물생육이 용이한 구조 △창의적,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진 실내 텃밭 등을 평가한다.

대상 1편, 최우수 1편, 우수 2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 작품들은 부산도시농업박람회 기간 중 설치·전시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3월 7일까지이며, 공모자격은 제한이 없고 팀 형태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국·내외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를 단순히 모방한 아이디어 응모는 제한된다.

2014.02.07.

.....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제1회 한·영 녹색건축포럼 개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발전방안 공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주한 영국대사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한·영 녹색건축포럼」이 2월 11일(화)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지난 11월 대통령 영국 국민방문 시 서명한 한·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의거 녹색건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지구환경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내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양국 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로, 국내 그린리모델링 관계자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영국 측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한 영국의 그린딜(Green Deal)정책과 관련 기술 등에 대하여 발표하며, 우리나라도 금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책과 그간의 추진 현황을 발표함으로써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영국의 그린딜 사례는 우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영국과 공동으로 녹색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포럼이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포럼을 통하여 국내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책, 산업, 금융이 한 단계 선진화될 뿐만 아니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이 사업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그린리모델링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2.10.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브이월드 서비스, 이제 손안에서 즐긴다

현실감 높은 고 정밀 3차원 지도 등 모바일 서비스 본격 오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조경제 및 정부3.0의 핵심 인프라인 브이월드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브이월드 모바일 서비스(IOS 및 안드로이드)를 2월 12일 본격 오픈한다고 밝혔다.

그간 브이월드는 실내에서 웹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급변 모바일 서비스가 본격 오픈됨으로써 실내외 등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오픈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현실감 높은 고 정밀 3차원 지도 △최신의 전국 영상지도 △22종의 국가 공간정보 △공시지가·토지이용현황 등 행정정보와 시설명칭, 주소 등 위치검색 및 이용자 현재 위치표시 등 현재 브이월드에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이다.

3차원 지도를 지원하는 브이월드는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인터넷 환경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다중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브이월드에 적용함으로써 누구나 인터넷 기반과 관계없이 브이월드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브이월드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84개 도시의 3차원 지도는 물론, 실내공간정보를 추가 오픈하고 문화재정보도 등 다양한 국가 공간정보도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API, 3D시뮬레이션 및 매쉬업 기능 등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기능도 제공함을 물론,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등 브이월드 활용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창업 컨설팅 및 기술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4.02.11.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독도, 동해까지 우리나라 영토 현황을 '한 눈에'

우리 영토·자연·인문정보를 망라한 종합기록, '국가지도집' 발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원장 임주빈)은 「국가지도집 발간 추진 계획」을 확정하여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7년 최초로 발간된 국가지도집은 세종시, 통합시, 철도, 도로 등 변화된 국토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대내외적 홍보정보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최근 중국과 일본이 독도, 동해, 대한해협, 이어도 등에 대한 영토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최신 국토 정보를 담은 국가지도집을 발간함으로써 우리의 국경 선·지명 등에 대해 인접국가와의 갈등 시 국가를 대표로 하고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간되는 국가지도집은 '14년~18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16년까지 국토와 세계 속의 대한민국(1권), 국토의 인문환경(2권), 국토의 자연환경(3권)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발간하고, '17~18년에는 UN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국어(영어,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가지도집도 별도로 제작한다.

또한 우리나라 최신 IT기술과도 접목하여 모든 콘텐츠를 디지털로 제작함으로써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지도집 발간 계획이 실행되면 선진국 수준의 국가지도집이 발간되어 국민의 국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국토교육의 도구로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영토와 고유지명, 국경선 등에 관한 인접국과의 잠재적 갈등과 긴장관계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의 공식자료와 홍보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14.02.12.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부산, 젊은이들의 열기가 넘치는 곳

CATs, 꿈팡팡624

CATs와 꿈팡팡624, 청년문화카페로 자리 잡아.....

삭막했던 서부산권이 복합문화공간 '컨테이너 아트터미널(이하 CATs)'과 창조문화활력센터 '꿈팡팡624'를 찾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뜨겁다.

부산시는 쇠퇴한 공업지역과 불량·노후 주거지역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사상구 괘법동 사상전철역 앞에 CATs를 건립했다. 이어 9월에는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 인근에 힙합문화 아지트 창조문화활력센터 '꿈팡팡624'를 준공했다.

지난해 7월 개관당시 부산 최초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큰 각광을 받은 CATs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이며, 각종 기획공연, 문화행사, 전시회 등을 통해 현재까지 1만 3천여 명이 방문해 서부산권역의 인디문화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3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도 다양한 기획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행사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인지도 높은 청년 인디문화인을 초

청, 공연을 통해 관객과 함께 하는 ‘CATs 불금 파티’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포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부산에서 제작된 인디영화들을 시민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 인근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덕천로터리 주변 젊은이들의 문화 활동 아지트로 자리 잡은 창조문화 활력센터 ‘꿈팡팡624’는 지난해 11월 개관한 후 락키정글, 동키호테 등 공연을 통해 힙합문화와 연극을 선보이면서 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울해도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비보이, 힙합, 팝핀 등의 대중적인 프로그램과 연극, 뮤지컬, 마당극 등 무대예술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화소의 지역 문화소통을 위한 골목돋자리 콘서트, 스트리트 오케스트라, 지구인 시장, 가족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예술가, 수요가족영화, 어쿠스틱 마당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CATs’와 ‘꿈팡팡 624’가 서부산권역 청년문화 메카로 자리 잡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강동권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조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2014.02.12.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손 안에 보물지도 ‘인천시 지도포털’ 서비스 시작

부동산 실거래가와 항공사진·지적도 등을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

인천시는 2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손 안에 보물지도 ‘인천시 지도포털’ 서비스 보고회를 갖고, 오는 2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인천부동산광장과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새

로운 IT 환경에 맞게 통합 개편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를 계약하고 군·구청 신고 수 약 45일 가량 소요되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개시일 신고 후 다음날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한, 이번 서비스로 관공서는 물론 일반기업 및 개인이 인천시의 다양한 지도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련 OPEN API도 함께 제공한다.

“인천시 지도포털” 서비스는 지도정보의 통합과 공유·공개로 정부 3.0을 실현하는 한편, 토지·지적·지도서비스 분야의 시민소통창구 “생생 브리핑 룸”을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부동산 정책과 현안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인천시 지도포털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최신 부동산거래정보를 모바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시민에게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며, 항공사진, 지적도와 연계되는 모바일의 내 위치 찾기는 IT 기술의 발달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외부에서 토지나 임야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2.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서울시, 공공데이터 쉽게 풀어주는 ‘데이터 시각화’ 개시

구청 공공데이터 발굴·개방하는 ‘구청 열린 데이터 광장’ 플랫폼 개발

현재 교통, 환경, 도시 관리 등 10개 분야 126종 총 2,273개 공공데이터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개방 중인 서울시가 복잡하고 어려운 자료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12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은 초 미세면

지 정보와 버스·지하철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서울 여행에 유익한 한국 관광 명소 정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예컨대 예산규모 변화를 단순히 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클릭하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이는 차트로 보여주거나 지하철 호선별 이용객을 숫자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의 크기로 나타내는 등 데이터를 쉽게 풀어주는 서비스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했던 이런 공공데이터 개방화 흐름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까지 확대, ‘구청 열린 데이터 광장’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개시 △구청 열린 데이터 광장 오픈 △개발 앱 공유 갤러리 추가 △오픈 API 인증키 무제한 발급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백서’ 발간 등이다.

이 중 ‘구청 열린 데이터 광장’은 서울시가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청별 특성을 갖춘 플랫폼을 개발·보급, 구청에서 직접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는 시스템으로, 시범운영 자치구는 작년 말에 자치구 최초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던 구로구(data.guro.go.kr)와 서대문구(data.sdm.go.rk) 2개 구이며, 올 하반기에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했지만 어렵고 복잡해서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시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쉽고 부담 없이 즐기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해 더 많은 정보가 시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홈페이지

2014.02.12.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단

한양도성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서울 한양도성 가이드북'

서울시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한양도성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의 순성(탐방)에 도움을 주기위해 ‘서울 한양도성 가이드북’(한국어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600여년에 걸친 선조들의 위대한 삶의 발자취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양도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선 가이드북에는 한양도성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았다. ‘역사를 품다·삶을 담다·미래를 보다’의 제목 아래 약 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일어난 한양도성의 변화상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잠정목록에 등재될 수 있었던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근현대 문화재·도성의 흔적·내외부 순성 길을 한권의 가이드북 안에 모두 담아 순성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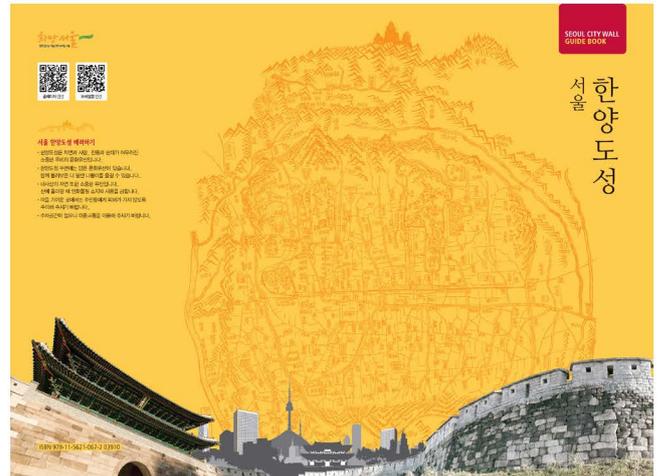
한양도성 전 구간을 기존의 4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흥인지문·승례문 구간은 대표적인 멸실 구간이지만 흥인지문 구간은 발달한 인근상권과 함께 도성의 자취를 지도상에 자세히 표시하였고, 승례문 구간은 정동길 근처에 남아있는 근현대 문화재·도성의 흔적·내외부 순성 길을 모두 담아 도로·길·명소를 배경삼아 옛 한양도성을 상상하며 순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근처 순성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역사전문가의 철저한 고증을 거친 설명과 사진을 덧붙이고 버스·지하철 등 교통편 이용방법을 제공하였고, 또한 도성 근처의 문화재와 명소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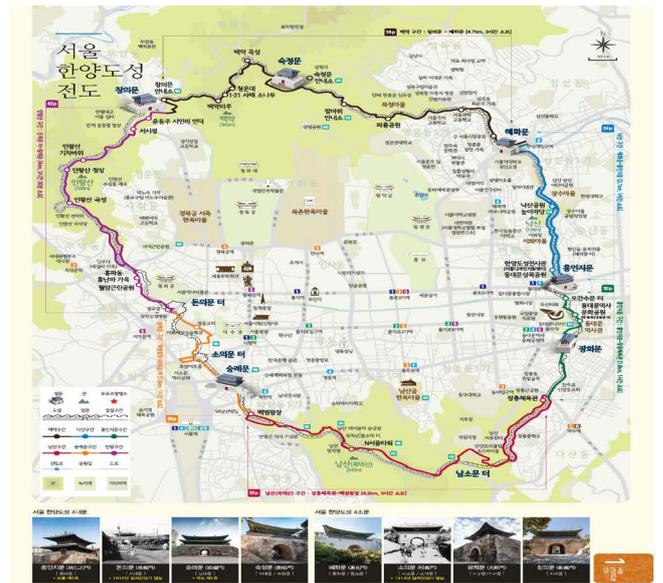
서울시는 이번 한국어판에 이어 3월에 외국어(영·중·일어) 가이드북을 발간할 예정이고, 책자 안 모든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향후 한양도성 교육·홍보자료의 표준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한양도성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종로구·중구·성북구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순성프로그램의 참여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광 홈페이지(www.visitseoul.net) 및 유관기관 웹사이트, 오는 3월 중순에 서비스 개시 예정인 한양도성 홈페이지(www.seoulcitywall.go.kr) 등에 e-book 형태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가이드북 표지



순성 전 구간 안내지도

2014.02.20.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특별한 서울 도보여행, '도성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투어'

서울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진행, 한양도성 무료 해설 투어 진행

서울시는 한양도성 무료 해설 투어 「도성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투어」 프로그램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설은 한양도성 안내해설자원활동가인 '서울KYC 도성길라잡이'가 무료로 진행하며, 4개 코스를 주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4개 투어코스는 △1주차 '광희문~승례문' △2주차 '승례문~창의문' △3주차 '창의문~혜화문' △4주차 '혜화문~광희문'으로, 소요시간은 13:30~17:00으로 약 3시간 30분 정도이다.

1주차(광희문~승례문) 구간은 테조, 세종시대의 축성방법과 공사 책임제를 보여주는 각자성석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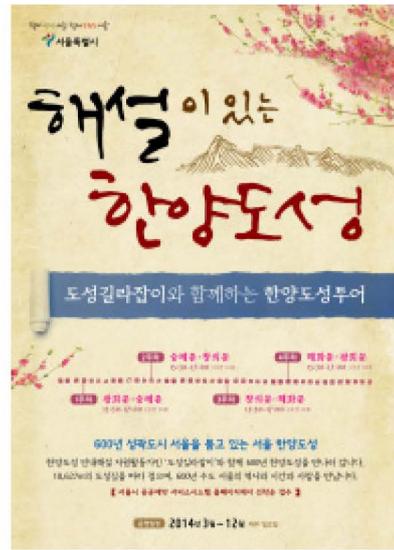
2주차(승례문~창의문) 구간은 5년 동안의 복구공사를 마친 승례문의 모습과 서울의 자연경관적 가치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인왕산코스루 구성되어 있다.

3주차(창의문~혜화문) 구간은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참석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의 추천 조망 점은 청운마루로 경복궁과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도시 설계의 핵심을 만날 수 있다.

4주차(혜화문~광희문) 구간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간으로 특히, 혜화문에서 낙산공원의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도성 인근마을인 이화동 벽화마을과 장수마을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점도 이 구간의 매력이다.

해설이 함께하는 이번 투어의 매력은 내사산 숲길과 도심, 주택가에 남아있는 한양도성의 흔적을 만나는 데 있다. 4개 구간별로 펼쳐지는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는 600년 성곽도시 수도 서울에

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도보여행인 셈이다. 몸과 마음이 바쁜 도시민에게 18.6km의 한양도성 걷기는 작은 쉼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이다.



도성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투어 웹포스트

투어신청은 사전예약제로 실시하며, 투어 비용은 무료이다. 접수는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시스템(<http://yeyak.seoul.go.kr/>)과 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회 80명씩(초등3학년 이상)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4월부터 '한양도성 달빛기행', 사회 저명인사와 시민명사가 함께하는 '한양도성 힐링투어', '성곽마을 투어', '한양도성 작은 음악회' 등 한양도성과 관련된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4.2.26.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녹색건축도시 부문

경기도, 2014년 옥상녹화 대상지 공모

경기농림진흥재단, 공공·민간·기획녹화분야 최대 70%까지 지원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건물 옥상을 생태공간으로 꾸미는 '옥상녹화 사업' 2014년 대상지를 2월 1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ggaf.or.kr)를 통해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조성된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부문은 공공녹화부문·민간녹화부문·기획녹화부문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설계비+공사비)의 30~50%이며, 기획녹화일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공공녹화부문은 공공시설로써 옥상녹화가 가능한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관공서,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등이다.

민간녹화부문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로써 옥상녹화가 가능한 대상지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기획녹화부문은 도시지역 내 바로 인접한 건물 3개 이상의 옥상녹화와 경사지붕 등의 경량형 옥상녹화, 에너지순환형 옥상녹화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녹화부문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최대 30%, 민간녹화부문은 최대 50%로 지원하며, 기획녹화부문은 최대 70%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지의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를 통하여 예비대상지를 선정하고, 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늘리고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103개 47,552㎡의 옥상을 녹화하여 환경생태 교육장, 생물서식지, 쉼터, 텃밭 등으로 조성하였다.



■ 남양주 에텐노인 요양센터 옥상녹화



■ 안양중앙성당 옥상녹화

2014.02.02.

경기농림진흥재단 도농교류부

자연과 경관이 어우러진 누리길을 누려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문화사업 누리길 정비 지속 추진

경남도는 2014년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마산만 노을길' 등 3개 사업에 국비 18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포함 총 29억 7500만 원(국비 18억 9000만 원, 지방비 10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누리길 조성사업은 마산만 해안경관과 노을을 조망할 수 있는 '마산만 노을길', 법기수원지 주변 편백나무를 활용하여 자연체험 및 치유공간을 제공하는 '양산 법기 치유의 길', 김해 백두산 누리길과 연계한 '신어산 누리길' 총 3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즐기는 산책길'이란 의미의 누리길 조성사업은 도민의 건강과 여가문화 확산에 대응한 산책로 및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문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누리길 조성사업은 조성 완료 3개소, 추진 중 2개소, 2014년 신규 3개소로 총 8개 사업이 2011년부터 63억 3300만 원(국비 42억 5000만 원, 지방비 20억 8300만 원)이 투입되어 조성되고 있다.

완료된 사업으로 '창원 천주산', '진해 장복산', '양산 금정산·천

녹색건축도시 부문



성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전망대, 데크로드, 안내판, 쉼터 등이 설치되어 한층 쾌적하고 자연과 조화된 산책로로써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 중인 사업인 '김해 백두산 누리길'은 친화·배움·보전·모험의 숲 등 테마별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마산 국화꽃 누리길'은 예곡동 일원에 계절별·테마별 꽃길 조성과 마을벽화, 안내시설 등 개성 있는 공간으로 누리길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마산만 노을길', '양산 범기 치유의길', '신어산 누리길'은 지역특성에 맞는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생태적·문화적 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남도 관계자는 “누리길 조성사업은 기존 산책로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불량한 미관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친환경문화사업임”을 강조하며, “향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즐기는 산책길과 지역 특성에 맞는 누리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및 생태자원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04.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사업자와 건축주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건물 건축주와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2월 7일 14:00, 국토연구원 대강당)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사업설명회에 앞서 건축주를 도와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할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를 선정(1.28)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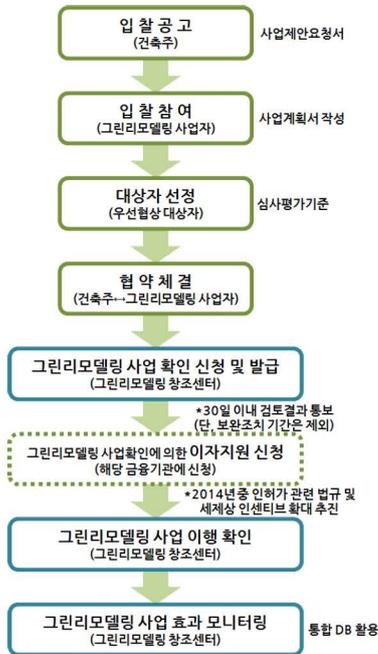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는 시공, 설계, 설비, 자재, 컨설팅 등 관련 분야 총 219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총 17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관련 분야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리모델링에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대거 참여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번 사업설명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건축주와 예비사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여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이 에너지가 새는 건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사업자는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성능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을 통하여 국민들이 믿고 편하게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거주 만족도 향상과 함께 중국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도 줄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분	기술인력 (최소기준)	자본금		사무실 면적(㎡)
		법인	개인	
종합 그린리모델링사업자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1명	2억 원 이상	4억 원 이상	분양면적 66㎡ 이상
전문 그린리모델링사업자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1명	해당사항 없음		분양면적 33㎡ 이상



■ 그린리모델링 사업절차

2014.02.04.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4년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3차원형상정보모델(BIM) 도입기반 구축, 건설기술정보서비스 등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사업 정보화 정책의 로드맵인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CALS)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계획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업체 기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건설정보표준개발, 시스템고도화 및 기술정보 확대 등

을 위한 4대 중점과제, 20개 세부시행과제(47억 투자)가 마련되어 추진된다.

우선, 설계 등에 3차원형상정보모델(BIM)의 활용을 위해 “BIM 표준 및 성과품 검사도구”의 개발이 추진되는데, BIM은 설계변경 최소화 및 시공오류 방지 등에 활용도가 커 미국·일본 등 건설 선진국에서 본격 도입, 활용 중이다.

다음, 「건설CALS(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http://www.calspia.go.kr>」의 “건설사업관리·용지보상 및 시설물관리” 시스템의 메인화면을 재설계하고 사용자 편의기능 등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건설공사사후평가시스템”의 평가자료 입력 및 통계·분석 기능 등도 개발하여 공공건설사업의 합리적 추진과 차후 사업에의 활용을 위한 정보화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건설·ENG업체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 <http://icon.codil.or.kr>」의 국내의 건설 정책, 설계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정보DB를 지속 확충하고 사용기능도 개선할 계획으로 사용자 의견반영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건설CALS(’03~)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01~)’의 구축·운영으로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으나, 시스템 전반이 노후하여 큰 틀의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시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여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업체 기술역량을 한층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 건설사업정보화(CALS) 구성도



■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 서비스 구성도(2013년 말)

■ BIM관련 국내 주요 연구 현황

주관부서 (연구기관)	연구명	예산	기간
기술정책과 (건설기술연구원)	BIM 표준, 라이브러리 및 성과품 검사도구 개발	550(건기연 연구예산)	2014.2~12
기술정책과 (국도교통진흥원)	토목분야 3차원 설계정보 스마트 공유체계 개발	70(건설기술 R&D)	2014.3~12 (기획연구)

■ BIM관련 국내 개발계획 및 지침

구분	개발계획 및 지침 명	소 관
개발계획	제2차 건설교통 R&D 기본계획(09)	기술정책과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 기본계획(12)	
지침&기준	시설사업 BIM적용기본지침서(10.12 제정, 건축부문)	조달청
	건설정보모델(BIM) 작성·납품 공통 기준(11.10)	건기연

■ 국외 BIM도입·적용 현황

국가	내용
미국	'08년부터 연방정부 사업에 BIM납품 의무화
영국	'11년 이후 공공건물 조달사업에 BIM납품 의무화를 선언
홍콩	'15년부터 모든 공공발주 현상설계에 BIM 적용
싱가포르	BCA(건설청) '12년 공공발주사업에 BIM 적용

2014.02.06.

국도교통부 기술정책과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총 20억 원 지원

국도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총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회를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사업과, 일반리모델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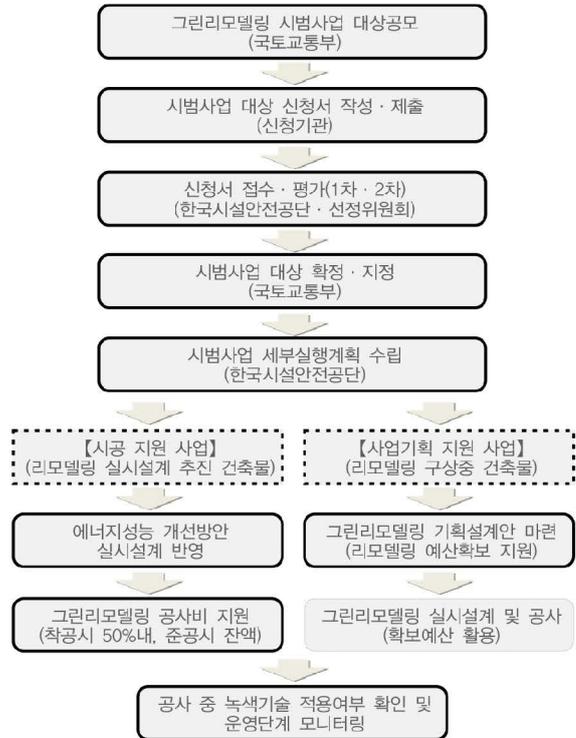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를 보조하는 시공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본 공모는 에너지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며, 2월 7일부터 3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하여 총 10개 사업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특히, 금년 시범사업은 정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으로 우선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공모 및 민간금융 활용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범사업 공모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원을 받은 건축물의 근무여건 및 만족도가 에너지성능 개선으로 확연히 좋아졌다”고 밝히면서 “건물분야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필수적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시행절차

2014.02.06.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201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원 규모

사업유형	사업 수	총사업비	지원내용
시공지원	3개 내외	13억 원	기술지원(시공품질점검, 모니터링) 공사비지원(착공시 50%이내, 준공시 잔액) 민간금융 활용 연계
사업기획	7개 내외	7억 원	기술지원(사전조사, 사업기획 등) 민간금융 활용 연계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 확충에 적극 나서 분산형 전원개발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新에너지 정책 추진

인천시에서는 금년 초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2035)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립 확충을 위한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기본계획의 주요 핵심은 원자력 의존도 축소 및 분산형 전원개

녹색건축도시 부문



발, 전력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인천시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자립 확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도심지역에 적합한 분산형 전원개발을 추진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공유재산 임대료율 인하) 등 행정적 지원강화, 인천소재 지역발전사들의 역할분담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강구 및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실천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유치한 송도국제도시를 대상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해 송도를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100Kw이하)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일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시설 설치자금의 일부융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가정용 소형(200W)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별세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 지원제도를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RPS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현실화하여 하수처리장, 우수지, 정수사업소의 유휴지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 인천소재 지역발전사들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상호 공동 모색한다.

그 동안 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공공기관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금년 5월 예정된 GCF이사회 기간 중에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 Global Green Hub Korea) 2014” 행사를 동시 개최해 국내·외 녹색시장을 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장으로 송도국제도시를 랜드마크(Land Mark)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이 녹색협력사업으로 공동 개최하는 GGHK행사는 에너지·환경 산업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됨에 따라 인천시가 세계 녹색산업 주도기반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02.06.
..... 인천광역시 녹색에너지정책과

고층건축물, 품질·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의무화

앞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하여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조규칙)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도 공사 중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금번 구조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③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지고,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4.02.1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광주시 탄소배출지도 나왔다

지역 특성 맞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

광주광역시 광역시 가운데서 최초로 지역의 최근 10년간 에너지 부문 탄소배출 현황을 담은 '탄소배출지도'를 제작했다.

(재)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함께 만든 이 지도는 지난 2011년까지 최근 10년간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석유 등 에너지 원별 소비 자료를 분석해 연도별, 202개 법정동별 에너지 소비 특성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담았다.

탄소배출지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광주시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지난 2002년 730만4000톤CO₂에서 2011년 913만5000톤CO₂로 25%가 증가했다.

2011년 기준으로 자치구 중에서는 광산구(31.4%), 북구(28.3%), 서구(22.3%), 남구(11.1%), 동구 (6.9%) 순으로 높았으며, 광산구와 서구의 증가폭이 현저히 높게 나왔다.

에너지원별로는 석유가 45.6%로 가장 많았고 전력 38.9%, 도시가스 14.6%, 상수도 0.9% 등의 순이었다. 특이할 점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의 소비량은 감소하나 전력과 도시가스는 증가 추세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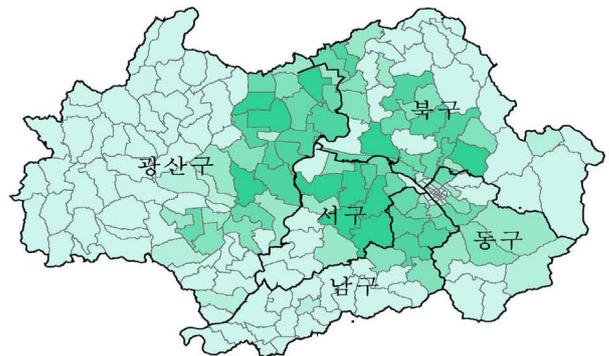
또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2년 5.28톤CO₂에서 2011년

6.29톤CO₂로 1.01톤CO₂이 증가했으며,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서구, 동구, 북구, 남구 순으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광주시는 온실가스 배출 자료를 정리해 온실가스가 어느 곳에서 어떤 요인으로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지도형태로 제작함으로써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202개 법정동별 분석 자료는 도시계획 수립이나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하고, 향후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감축하기 위해 구축할 예정인 '도시탄소관리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재)기후변화대응센터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이번에 제작된 기후탄소지도를 관련 실·과와 자치구, 행정동에 배부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도시탄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와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 톤)



■ 광주광역시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2011)



2014.02.10.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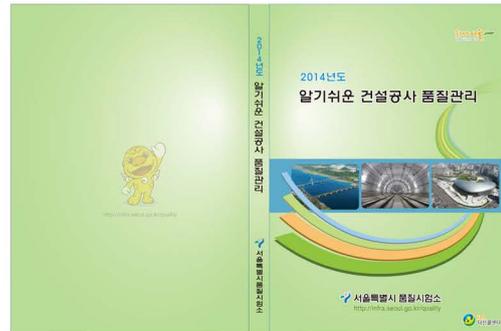
서울시, 「알기 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발간 품질관리 일반, 건설공사 품질관리요령, 품질시험 방법 등 다양한 내용실려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 관련 직원 및 품질관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알기 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손쉽게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관리 일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절차, 토질·재료·화학 분야별 품질시험방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법령 및 지침, 현장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책자는 건축, 토목, 상·하수도 공사 등 품질관리자가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정리하여 공사 현장 담당자의 품질관리 능력을 배양시킬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는 이번에 모두 1,800부를 발간해 건설 관련 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안전실, 상수도사업본부 및 25개 자치구 등 공무원,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건설회사 직원 및 감리원을 대상으로 3~4월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방법 등 건설기술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한 후 배포할 계획이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표지

2014.02.10.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땀하고 해 뜰 날! 경기도 햇살하우징 강화

2014년 80호 지원... 단열, 창호·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절감 시공

경기도가 취약계층 주택을 개·보수 해 에너지관리 효율을 높이는 ‘햇살하우징사업’을 강화한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낡은 주택에 단열 시공,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절감 시공을 해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에너지관리공단이 2013년부터 실시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도는 올해 4억 원을 들여 80호를 대상으로 햇살하우징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자가 주택을 비롯해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생활시설보강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혜 폭을 넓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진단비용 1천만 원을 지원해 전문진단업체를 통해 보다 세밀한 진단과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시공사는 대상가구 실태조사 및 공사 시행·관리·감독을 맡는다.

햇살하우징 수혜를 원하는 가구는 각 시·군 주택부서로 신청하

면 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따뜻하고 포근한 쉼터를 제공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주거복지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햇살하우징사업을 통해 총 81호를 지원했으며,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4%가 만족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햇살하우징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11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 강태구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양낙모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추진 발대식을 가졌다.

[햇살하우징 사업 사례]



■ 외벽 단열(전)



■ 외벽 단열(후)



■ 지붕 공사(전)



■ 지붕 공사(후)



■ 창고 교체(전)



■ 창고 교체(후)

2014.02.11.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주택행정팀

광주시, 저소득층 형광등 led로 무료 교체 기초생활수급자 1만 가구·복지시설 24곳 대상

광주광역시시는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의 조명을 led로 무료 교체 해주는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을 시행한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은 올해부터 생산·판매가 전면 금지된 백열등과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led조명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복지시설이며 △백열등을 led전구로 교체 △노후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옥내 조명 선로 간이 점검·보수 등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시행기준이 확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1만 가구를 선정하고, 복지 시설은 지난해 사업 참여를 신청한 24곳을 대상으로 4월 시작해 올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16억 원에 시비 등을 더해 총 사업비 23억으로 추진, 지역 led조명 생산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2015년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국비 확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3월 복지시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비, 에너지절감 등을 평가해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지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은 “백열등, 노후 형광등 교체와 함께 전기 전문업체로부터 옥내 조명 누전 점검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4.02.11.

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관실



저탄소 녹색생활의 체험·교육의 장

부산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개관식 개최

부산시는 환경부 국책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 시민교육시설인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공사를 마치고 2월 13일 북구 화명동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북구 학사로 118, 이하 체험교육관)에서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 국회의원, 시·구의회의원,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축하공연, 기념식수, 테이프 컷팅, 전시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체험교육관은 화명동 중앙공원부지(11,977.5㎡)에 지하 1층, 지상 2층(건축면적 1,302.21㎡) 규모로 총사업비 49억 9천만 원을 투입(환경부 24.95억, 부산시 24.95억), 지난해 12월 준공해 이번에 개관한다. 주요 시설로는 세미나실, 체험전시실, 영상체험실 등이 있으며,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견학 및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체험교육관 건물은 온실가스 저감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비해 5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 부산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사진

2014.02.11.

.....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경북도, U-City 건설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 건설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U-City 사업 계획수립, U-City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가 구성된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경북도의 U-City 건설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다양한 도시개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2.

..... 경상북도

해외건설시장 "최신 인프라 정책·정보", 이곳에서 한눈에!

'13년 해외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시 참가자 발표자료
(13개국 34건) 제공

국토교통부는 미얀마, 몽골,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총 13개국의 인프라 정책현황 및 주요 인프라 사업 관련 자료 34건을 국토부·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제공정보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기업들이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의 주택·도시, 상하수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최근 정책동향, 인프라 투자계획 및 담당부처 소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자료는 13년도에 국토부가 처음 시행한 해외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에 참여한 연수 참가자들이 연수프로그램 중에 발표한 자료로서,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준비·발표한 자료라는 점에서 신뢰도와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최초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7개국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74명이 참석하여 한국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우리 업계와 네트워킹 기회도 가졌다.

올해에는 동 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상 인원을 전년도 70여 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주한공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주한공관 경제담당 외교관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초청연수와 같은 정부 대 정부(G to G)간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 및 인프라 관련정보를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진출리스크를 낮추어 줄이고, 보다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동 정보 제공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올해 초청연수에서도 연수 참가자들이 해당국가의 인프라 관련 정책 및 사업정보를 발표토록 하고, 연수 종료 후 해당 정보를 취합해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매년 각국의 인프라 관련 최신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공유된다면 향후에는 양과 질 모두 업계에서 선호하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4.02.13.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자연·문화자원 활용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전남도, 체험·경관 연계한 도보 중심 길 제공키로

전라남도는 강·해안·숲이 간직한 아름다운 자연, 역사·문화자원 등을 다양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험하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보 중심의 자연 친화형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등 국가하천에 인접한 강길, 서남해안 해안선에 인접한 해안길, 주요 정맥에 인접한 숲 생태길로 구분된다. 가족단위 남녀노소 국민들이 쉽게 걷고 즐길 수 있게 숲, 강, 하천, 마을, 옛길, 해안을 위주로 추진된다. 또한, 등산을 위주로 하는 수직적인 길을 지양하고,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수평적 길로 조성된다.

생태탐방로는 2009년 나주 영산강과 장성 황룡강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나주·영광 등 7개 시군에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개소 228km를 개설했다. 탐방로 내에 탐조대, 탐방데크,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이용객에게 생태관광의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도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곡성 청계동 계곡 구간 3km, 영광 백수해안도로 구간 30km, 강진 칠량면 구간 8km에 다양한 지역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탐방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및 복원을 통한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탐방지역을 보전지역과, 시설 가능지역으로 구분하고 보전지역은 관리·학습 목적의 접근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설 가능지역에는 탐방로 및 각종 편의시설물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기후변화지원관은 “현재 트레킹 인구는 등산인구의 10~20%로 추정되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남도의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생태탐방로를 확대 조성해



최상의 생태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내 탐방로 주변의 주요 생태·역사문화자원으로는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와 팽이갈매기 서식지인 칠산도와 200여 그루의 울창한 소나무림이 있는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한여름 피서지로 널리 알려진 곡성 오곡면의 압록유원지, 천연기념물인 제201-2호 큰고니를 비롯한 다양한 조류 서식지가 분포한 강진만 등이 있다.

2014.02.15.

..... 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

힐링 도시숲 전국에 446개소 조성 산림청, 도시숲 조성에 1,092억 원 투입

도시 생활권에 녹지공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1,0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숲 446개소(255ha)와 가로수 531km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성되는 도시 숲은 도로·건물 주변 등 소규모 자투리 공간의 녹색쌈지숲 126개소, 공단·주요병원 주변과 폐기물 매립지 등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숲 55개소, 도시 내·외곽 산림공원 33개소, 가로수 531km 등이다.

국·공유지를 이용해 조성되는 도시 숲을 통해 도시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와 숲의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02.17.

..... 산림청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축제, 3월 광주에서 열린다.

세계 21개국 156개사 참여……, 64개사 바이어 참가신청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인 ‘sweet 2014’를 3월 12일부터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현재까지 전 세계 21개국 156개사가 참가를 확정해 다시 한 번 광주지역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공고히 할 예정이다.

‘sweet 2014’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참가업체의 면면이 화려하다. 먼저 국내 에너지 대표 공기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참가가 눈에 띄며,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탐인프라솔라 등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참여한다.

특히 얼마 전 지열분야에서 ‘위더해머’라는 독보적인 기술로 구글의 지열발전 참여를 이끌어내고 러시아를 비롯해 10여 개국에 1조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한진디앤비’도 참가키로 해 행사장을 찾는 국내외 바이어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풍력업계에서는 ‘한국해상풍력’의 참가가 두드러진다. 한국해상풍력은 정부가 2020년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남해 2.5gw 해당풍력사업 개발 주체로 한전과 발전 6사(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sweet 2014’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대규모 해외수출상담회도 열린다. 이미 미국,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중국, 알제리, 이란 등 21개국 64개사 빅바이어들이 ‘sweet 2014’ 수출상담회에 참가 신청을 마쳤다.

국내 관련 전시회 중 최대 규모의 해외바이어 참가율과 매년 수천

만 달리가 넘는 수출 상담을 성사시킨 'sweet'의 명성답게 이번 바이어 명단에는 연매출 1억 불 이상의 글로벌 빅바이어 22개사와 1000만 불 이상의 유력바이어 18개사가 포함돼 역대 최고 구매력을 가진 바이어들이 방문해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총 2억 3000만 불) 상담 실적을 다시 한 번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에는 굵직하고 다양한 부대행사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전체 행사의 질과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는 4개 세션을 포함해 500여 명의 외부 전문 관람객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노영민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국회 신 성장 포럼', 호남지역사업평가원의 '성과보고회' 등 20여 개의 전문성 있는 부대행사가 동시에 열려 타 지역에서 3일간 5000명 이상의 전문 관람객이 광주를 찾은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강운테 광주시장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전문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sweet 2014' 개최를 통해 관련 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광주·전남의 위상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02.17.

..... 광주광역시 전략사업과

서울시, 건설공사 계획부터 관리까지 체계화 한 매뉴얼 발간

서울시는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관계법규 및 행정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책 한권만 보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매뉴얼'을 지자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관계법령 및 지침 답아>

서울시는 그 동안 각 실·국·본부 단위로 해당업무에 필요한 부

분만 업무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왔으나,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을 묶어놓은 별도 업무지침서가 없어 실무자들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 부서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법령, 기준, 자치법규, 업무편람, 매뉴얼, 지침서 등 주요내용을 하나로 통합하고,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절차 등 주요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매뉴얼'을 발간했다.

<건설공사 계획수립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한권으로>

건설공사 매뉴얼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1장은 건설공사 일반사항 △2장은 건설기술용역 업무 △3장은 건설공사 계획업무 △4장은 설계단계 업무 △5장은 공사단계 업무 △6장은 유지관리 업무 순으로 구성되었다.

부록편에는 건설공사 관련 조례 및 각종 기준을 수록하여 매뉴얼을 실무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건설 분야 관련 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그 동안 건설공사 관련 실무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매뉴얼은 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추진절차 뿐만 아니라 각 건설공사 추진단계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업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설계 누락 및 오류 또는 공사 중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설계 변경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매뉴얼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건설공사 관련 기업체 등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건설공사 관련 기준들의 잦은 변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에 연계구축하고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4.02.17.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광주시, 서민 주거복지에 주력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 도시재생형 행복주택 건립 추진

광주광역시시는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공간 개선과 도심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공사가 관리중인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쌍촌, 하남, 금호지구) 총 3500 가구에 대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과 북구 서림마을 등 2곳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 후 15년 이상 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제 대를 선정하고 국비와 시비를 투입,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1만 7638가구의 노후보일러와 발코니 창호를 교체하고 욕실 내부 등을 개선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예산이 복지 분야로 많이 집중됨에 따라 사업비 총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 노력한 결과 사업비가 추가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 대상을 선정해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가 동절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대상으로 3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국비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서림마을에 500가구(313억 원),

광주역 주변 유희지에 700가구(439억 원)를 총 752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앞으로 사업지구와 사업자 지정을 거쳐 올 8월 이후 설계, 승인, 착공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이 조성되면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 추진해 불량 주거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공간 개선과 도심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며 “입주민 삶의 질과 계층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4.2.19.

..... 광주광역시 대변인실

목포 복항에 생태숲 조성 국비로 추진

전남도,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선정돼 5억 5천만 원 투입

전라남도는 목포의 ‘복항 생태숲’ 조성사업이 환경부의 2014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최종 확정돼 국비 5억 5천만 원을 확보, 생태 복원사업에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목포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와 목포해양경찰서 사이에 위치한 내대지 1만 3천㎡다.

이 일대는 그동안 주민들의 무단 경작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심 미관을 크게 해쳤던 곳이다. 나무숲과 연못, 탐방로 등 완충녹지를 활용한 생태적 복원이 완료되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맹꽁이의 대체 서식지로 재탄생해 지역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을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전액 국비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2011년 순천 내륙습지 복원사업(5억 원), 2013년 무안 남악

신도시 소생물 서식지 생태복원(9억 원) 사업을 추진했다.

2014.02.25.
..... 전라남도 대변인실

도시 내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조성 확대

환경부,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도시민에 생태휴식공간 제공 위해 '17년까지 '자연마당' 20개소 조성 추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도시의 생태휴식공간을 목표로 도입된 '자연마당' 조성 사업을 2017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마당'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도시의 생태거점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에 대도시 3개 지역(서울 중계동, 부산 용호동, 대구 불로동)에 착공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인천 서구, 전북 익산시 등 2개 지역을 착공한다.

이들 2개 지역은 지난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2015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분	인천 서구 연희동	전북 익산시 영등동
조성면적	71,274㎡	55,000㎡
사업비 ('13~'15)	34억 원	30억 원
사업지 특징	폐자재, 고물집하, 묘목장 등으로 방치된 지역	원래 낮은 구릉성 산지였으나 불법경작, 휴경, 주거지 등으로 훼손 방치된 지역
	청라지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도시 확장지역	학교, 주택 등 시가화된 지역으로 둘러싸여 접근성 우수
	주변 구릉성 임야, 농경지(철새도래) 등 위치	주변으로 소나무림, 갈대습지 등이 자연자원 분포

'자연마당'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인천, 익산의 각 사업현장에서 환경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자연마당' 사업지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도시 내 소규모의 훼손지 복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생태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마당' 신규 사업지는 다양한 생물서식공간 등 조성을 위해 최소면적 5만㎡ 이상의 도시 내 유휴·방치된 지역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생활권 지역을 대상으로 3월중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 내 폐철도부지, 훼손습지, 인공지반 등 소규모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생태공간 조성 및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2014년에 15개 지역(약 15만㎡, 70억 원)에 대한 생태복원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연마당' 조성 및 훼손지 복원 사업을 통해 생활권 가까이에서 휴식·체험 등 자연이 주는 혜택을 시민들이 보다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2.28.
..... 환경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가꾸기에 1,260억 원 지원 산책길, 공원, 실외체육시설 등 여가문화공간 조성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올해 1,26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진입로와 주차장, 복지회관 등 생활편의시설 개선에 490억 원, 공원, 누리길(산책길) 등 여가휴식공간 조성에 270억 원, 토지매수에 500억 원 등 총 1,2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 안길과 주차장, 마을회관, 도시가스관 등 생활밀착형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49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휴식공간 조성에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2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생태공원, 힐링 숲 등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가인구에 비해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원활한 구역 관리를 위해, 올해 토지매수에 전년대비 36% 증가한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개발억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여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 전]

[조성 후]



■ 사업 전후 사진

사업별	대 상		최종선정		탈 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1	37,703	39	22,000	32	15,703
경 관	21	11,485	10	5,772	11	5,713
누 리 길	24	12,923	14	8,113	10	4,810
여가녹지	21	11,137	12	6,897	9	4,240
전통문화	5	2,158	3	1,218	2	940

■ 총괄현황(단위: 백만 원)

2014.02.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연구기관 등에 재정 지원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토록 하였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복도시 건축수수 증가에 대응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확대(30명→60명)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정부에서는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 행복도시특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자족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03.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양성화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법 시공되거나 사용 미 승인된 건축물이다.

양성화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3)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그동안 건축법에 맞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 모두 적법한 건축물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와 각 구·군을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2.03.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서울시, 전국 최초 '의료안심주택' 222세대 이달 첫 삽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맞은편.. 이달 중 착공~'15년 5월 입주 목표

현관이나 화장실을 일정 시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 관리사무소로 연락돼 환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의료안심주택'이 이달 중 착공, 첫 삽을 뜬다.

서울시 첫 의료안심주택은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바로 길 건너편에 연면적 13,099.58㎡에 2개 동(지하1층~지상7층) 총 222세대(18㎡ 92세대, 29㎡ 130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주택 내부에는 △미세한 움직임 감지하는 생활리듬체크시스템 △무장애(barrier free)공간 △케어센터 △커뮤니티존 △텃밭·양봉장 등을 갖춘 옥상 등 계획 단계부터 입주자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한다.

우선, 의료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인 '생활리듬체크시스템'을 적용하여 입주자가 일정 시간 현관문이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되며, 욕실에는 응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소로 연결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서울의료원이나 119센터 등으로 바로 연계해주는 '양방향 안전시스템'도 도입된다.

집 안팎은 무장애공간(barrier free)으로 계획하여 집 밖에는 단지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고 복도는 폭을 넓혀(1.5m→2.1m) 양방향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한다. 경사로는 최소화하고 벽에는 걸어 다닐 때 잡을 수 있는 핸드레인을 설치해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을 최대한 배려한다.

1층과 2층, 옥상엔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케어센터, 복지시설, 공동텃밭 등이 조성된다. 1층에는 케어센터와 물리치료실 및

피트니스센터가 운영되며, 2층 커뮤니티 존은 사랑채 존과 취미 생활 존 두 가지 테마로 조성하여 휴식 및 정보공유 장소로 활용한다. 또한, 옥상에는 유기농 텃밭과 양봉장을 조성하여 함께 채소를 키우고 벌을 키워 꿀을 따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질 의료안심주택을 이달 중으로 착공, 2015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같은 해 5월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는 '15년 2월 모집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내동 의료안심주택을 계기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립병원, 보건소 인근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등을 매입해서 의료안심주택 공급량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료안심주택 투시도

2014.02.03.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 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임대관리업 도입과 관련하여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절차, ③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④ 보증상품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으로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이상 사업 시 의무등록 하도록 하였고,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 원과 전문 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 원과 전문 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 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말소,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및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와 금액의 서면 통지,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 과징금 납부 등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보증상품의 의무가입’으로는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를 규정하였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추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진입장벽을 완화하였고, 「주택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2월 7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14.02.04.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대구시, 국가 R&D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국가과학산업단지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기반 다져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2011년 1월), DGIST 설립(2009년 2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을 유치하는 등 대구를 R&D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09년부터 지역 성장 유망기업에 혁신형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비 168억 원을 지원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이 결과 전국 시·도별 정부 R&D 투자 순위에서 2009년 10위에서 2012년 8위를 기록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는 2010년 659개소에서 2013년 932개소로 113개 증가하여 전국평균 증가율 12.2%보다 높은 13.8%로 전국 7위를 하였다.

대구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국가 R&D 거점인 대덕특구의 성공모델을 지역에 안착시키고, 공공기술 사업화 견인을 위해 연구소기업 12개를 '14년 추가로 설치하여 창조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orld-class 300 기업에 지역강소·중견기업 12개사가 선정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금년에도 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산업 네트워크 구성·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대구시 전담 TF팀 구성 등 창조적 아이디어가 창업과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대구연구개발특구 확대, 테크비즈니스센터 건립,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추가유지 등 지역 R&D 신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R&D 사업 효율성 제고와 성과지표 통계화, 시 정책기획 통계자료 활용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지역기업 R&D 지원과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4.02.04.

.....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정책관

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MWM City)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인천시는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과 함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계획 공모에 따라 인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닌 중·동구

일원 총규모 2.2km² 면적에 개항장, 차이나타운, 누들 지역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내항1,8부두 재개발 및 동인천역 주변 중심시가 지재생을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 「인천개항 창조문화도시(MWM City) 활성화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신청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일환으로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 번 공청회에서 MWM City 선도사업구상 주제발표를 통해 2015년도에 개방되는 내항8부두, 수인선 개통, 월미레일바이크 운행 등 핵심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변 인천역, 차이나타운, 개항장, 신포시장을 연결하는 연계동선(브리지)비용 및 동인천역 아시아누들타운 건립비용으로 총 규모 500억 원의 선도지역지원예산을 투입할 구상을 설명한다.

또한, 개항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인천세관 역사공원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각 정부부처 지원사업과 지자체 추진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청운대학교 진영환 교수가 주재하고, 인천시의회, 국토연구원, 대학, 유관기관 소속 관계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MWM City 선도사업구상에 대한 열띤 토론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각계 전문가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MWM City 선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민의 염원을 모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참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지자체 제안지구 등으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행복주택 후보지

구분	내용
부산광역시	· 동래역 철도부지(약 400호)
	· 서구 도심재생용지(약 1,200호)
포천시	· 미니복합타운(약 300호)
광주광역시	· 광주역 철도부지(약 700호)
	· 북구 도심재생용지(약 500호)
고양시	· 심송 택지지구(약 1,360호)

2014.02.06.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여수 엑스포장,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린으로 조성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와 연계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개발

전라남도가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계획이 정부의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린 항만 조성사업'과 연계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양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여수 엑스포장 등 전국 6개 주요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이곳에 세관·출입국관리 및 검역(CIQ) 처리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지원 거점형 마린 항만 조성을 위해 올해 개발예산 150억 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6개 국가재정 지원 대상 항만에 대해서는 방파제 등 기반 시설에 개소당 30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 선정 이후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여수 엑스포장은 올해 기반시설비 16억 원이 확보돼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의 단기개발 기한인 2017년까지 300척(해상 150·육상 150) 수용규모의 거점 마린 항만으로 조성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해양산업 분야를 육성·발전 시키고 요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6천475km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2천219개의 섬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4개 로드, 28개 유희항만에 2025년까지 999km에 이르는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4개 로드(허브항)는 '아일랜드(목포항)', '장보고(완도항)', '엑스포(여수신항)', '영산강(나불도)'이다.

중장기 국가 재정지원 대상인 목포항은 내항의 해경 및 어선부두를 2015년까지 북항으로 이전하고 1단계로 내항을 430척 규모의 마린 전용항만으로 2019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요트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올해 목포 마린아일랜드 시설 확충 20억 원, 완도항 클럽하우스 건립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요트동호회를 구성하는 등 요트 붐 조성과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여수 엑스포장 거점 마린 항만이 완공되면 전시공간을 활용한 마린산업 전시, 국제 보트쇼 개최, 해양레저 인력양성 등을 통한 사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요트관광 대중화를 촉진하고 국내 및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요트 항로를 다변화해 여수가 동북아 요트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2.05.

.....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주민설명회가 오는 7일(금) 오후 2시에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은 급격한 산업화와 개인주의로 파괴된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 시켜 다양한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 주민 주도의 문화·복지·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자치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3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강의와 우수 사례 설명, 올해 추진되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 신청은 이 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에 단체소개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다.

2014.02.06.

..... 강원도 자치정책과

대구 도시경관 '조망점' 설치, 시민의견 수렴

대구 대표 우수 경관, 조망 장소 물색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2011년 지정한 대표 경관 52선(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 홈페이지》열린디자인》일반자료》44번)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사진촬영 등에 이용될 조망점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망점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1년 앞산전망대 설치를 필두로 반야월 연밭에 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곳을 선택하여 시민들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조망점 공사를 한 바 있다.

올해도 새로운 조망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군에서 추천하는 대상지와 시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경관의 조망점 대상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지역적 특성과 장소의 적합성, 공감대 형성, 지속적 유지·활용

가능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경관 조망점에 해안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 안철민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은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사업이 경관자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연훼손 방지의 기능과 더불어 관광 명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4.02.07.

.....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토지관련 민원 해결 될 것이다!

사실도로 일제조사정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적(地籍)행정 핵심 추진업무를 사실상 도로 일제조사 정리 및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도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핵심추진 업무인 사실상 도로 일제조사 정리는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재산세 납부 등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사실상 도로를 일제조사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금년 3월까지 일제조사하여 정리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지적공부정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단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코자 하는 사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업으로서, 대상은 20만 필지·241km²이며 2030년까지 464억 원(국비)을 투자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게 된다.

작년도에 한경면 판포지구 등 10개 지구 4,987필지·5,192천m²로 사업비 10억 원(국비)을 투입한 기초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의 현재 공정률은 30%로서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지적경계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송비·측량비 등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2014.02.1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울산시, 명품 디자인 도시 청사진 밝혀

올해 울산다운 도시 디자인 구축 및 도시경관사업 적극 추진

울산시는 2014년을 도시디자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자연·사람·도시가 조화로운 창조적 생태경관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사업 시행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울산다운 도시디자인 구축과 다양한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추진과 체계적 도시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난립해 있는 옥외간판 재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차별화된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마련한다.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및 상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사인문화의 수준 향상 도모, 해안가 및 도시중심가의 생태환경과 어울리는 도시경관사업을 시행한다.

울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도시경관을 촬영·기록·수집된 영상자료를 DB화하는 경관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한 문양디자인을 개발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고, 5년 이상 경과된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브랜드 디자인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모범업소 인증제 실시, 연중 불법 광고물 정비, 달빛누리길 조성, 숨 쉬는 길 조성, 안양 중심시까지 거리 조성 사업 등도 시행된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감소시키고,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명품도시 울산발전의 토대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11.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공간정보기술,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다

한-아부다비 공간정보 공동세미나 개최(2.4)를 통해 기술협력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UAE 아부다비 정부와 공간정보기술 협력 및 수주지원을 위해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공간정보기술협력 세미나」를 개최(2.4)하고 현지에서 기술자문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한-아부다비 공간정보기술협력 세미나」(2.4)에서 국토교통부는 DMA, ADSIC, DoT, UPC, 3개 지자체 등 아부다비 정부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부다비측의 관심사항인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정책, 토지행정, 토지정보화시스템 등을 발표하였다.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정책 수립 등이 미흡하고 지자체 간 공간정보시스템 연계가 부족한 아부다비 정부는 한국의 경험을 도입하기를 희망하며 자국의 공간정보

행정·제도·시스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자문을 요청하였다.

금번 「한-아부다비 공간정보기술협력 세미나」(2.4)에서 전체 세션을 △공간정보 계획, △공간정보 및 시설물관리, △토지와 공간정보 등 3개로 나누어 상호 활발한 기술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공간정보 공동세미나에서 다루어진 기술협력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5일 및 2.6일, 양일 간 아부다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과 도시계획, 교통, 정보화시스템, 지자체 공간정보정책 등에 대해 실무수준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기술, 행정, 제도, 인력 등의 분야에서 미흡한 아부다비 정부가 우리의 우수한 경험을 도입하기 위해 양국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희망함에 따라, 금번 출장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확대·발전시키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양국 간 실무자 수준의 연락책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세부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정부대표단 출장, 공간정보인력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한-아부다비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에도 중동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12.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및 지원시설부지 행복주택 건설 지원 확정

행복주택 건설자금의 70% 지원(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12일 국토교통부의 미니복합타운과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의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계획 발표로 경남도의 미래 50년 전략사업

중 하나인 함안·창녕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한 산업단지 정주권 개선 행복주택 건설 지원 안은 행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70%를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 재정으로 30%, 국민주택기금으로 40%를 지원하게 되어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30% 투자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적은 비용으로도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건설된 행복주택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번 지원계획으로 경남은 함안·창녕 미니복합타운 조성과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의 행복주택 건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5월 지정되어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공정 95%로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2만 5000㎡에 875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2012년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함안·창녕 미니복합타운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으로, 400호 이상이 예산지원을 받아 행복주택으로 공급되게 된다. 이로써 경남지역에 산업단지 근로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 최소 1275호 이상 공급되는 것이다.

한편, 경남도는 산업단지 인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니복합타운' 건설을 2014년 주요 도정과제로 채택하여 기본용역을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왔었다. 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보다 진전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창녕 미니복합타운 조감도

2014.02.11.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에 행복주택 2,450호 건설추진

연수역에 600호, 주안역에 200호, 동인천역에 250호, 남구
도심주거지 재생용지에 1,400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5개 행복주택사업 지구 중 수요가 충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4개 지구에 행복주택 약 2,45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연수역 주변 주차장 및 유휴부지(철도부지+市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약 600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수인선 연수역에 연결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인근에 5천여 업체가 입주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1.5km)가 있으며 가천대 메디컬캠퍼스(0.9km) 등에서도 접근성이 양호하여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특히,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철도로 단절된 지역의 생활권을 회복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300m

규모의 뚝개공원을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주안역 주변 철도부지에도 행복주택 약 2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경인선 전철 주안역 및 버스환승정류장에서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주안국가산업단지(2.2km) 등 고용시설과 인하대학교(2.7km), 인천대 제물포캠퍼스(1.8km), 청운대 인천캠퍼스(1.8km) 등 대학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동인천역 주변(私有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약 25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동인천역과 연결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1.2km 이내 현대제철 공장, 두산인프라코어 공장 등이 위치하여 행복주택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동인천역 주변은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95% 이상이고, 공·폐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인천광역시·중구청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남구 도심내 노후·불량 주거지 밀집지역인 송의동 및 용현동 일원의 용마루 도심주거지재생용지에 행복주택 약 1,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지와 연결해 버스정류장(10개 노선)이 있고 '15년 말 개통 예정인 수인선 남부역과 용현역이 위치하여 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1km 이내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 약 3만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2km 이내 인하대학교 병원이 있어 행복주택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입주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지구에 연결해 있는 철도부지(약 22,196㎡)를 편입하여 진입도로,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대구시 등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부지현황과 수요를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선별·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 제안지구 등으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행복주택 후보지

구분	내용	호수(잠정)	사업시행자(잠정)
계		6,910	
부산광역시	· 동래역 철도부지	400	부산도시공사
	· 서구 도심재생용지	1,200	부산도시공사
포천시	· 미니복합타운	300	포천시 등
광주광역시	· 광주역 철도부지	700	광주도시공사
	· 북구 도심재생용지	500	광주도시공사
고양시	· 삼송 택지지구	1,360	NH
	· 주안역 철도부지	200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 연수역 철도부지+주차장부지	600	인천도시공사
	· 동인천역 철도부지+도심재생용지	250	인천도시공사
	· 남구 도심재생용지	1,400	NH

2014.02.12.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중부권 마리나항만 개발 밑그림 그린다

12일 용역보고회...후보지 21곳 현지조사 결과 보고

충남도가 오는 9월까지 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미래 중부권 핵심 마리나항만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와 지역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수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충남 서해안의 마리나항만 개발대상 후보지 21곳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와 정부의 해양 정책 방향, 국내외 마리나 항만개발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뤄졌다.

도내 마리나 항만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발가능성,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성 등에 대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해 미래 중부권 핵심 마리나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도는 올해 9월까지 경쟁력이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후보지를 선정해 '충청남도 마리나 항만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도 국가마리나항만기본계획(2010~2019) 수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또 향후 국가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도내 마리나 항만에 대해 사업이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을 비롯한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4.02.12.

충청남도 해양항만과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새 정부 출범이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계·금융·공급 등이 망라된 부동산 대책(4.1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정책〉

정부는 지난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급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및 유효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과거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고, 취득세율 향구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금리 인하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도 시행하였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연 11만호 공급 추진)하고, 주택바우처(개편 주거급여) 도입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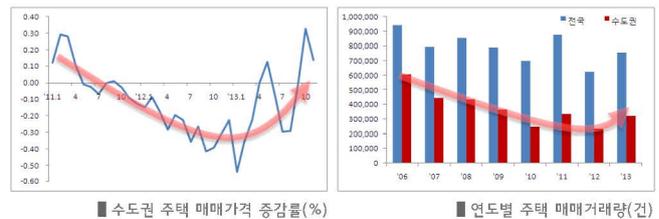
[주택시장 정상화]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13.1~12월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하여,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4.1대책 이후인 '13.4~12월에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 1~3월 △1.1%와 비교할 때 회복세를 보였다.

'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2만 건으로, 전년(73.5만 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 건)에 근접하였으며, '13.4~12월은 71.1만 건으로 전년 동기(58.4만 건) 대비

21.7% 증가, 예년(5년평균 66.2만 건) 대비 7.4% 증가하였다.



국토연구원 분석('14.1월)에 따르면, 새 정부 주택정책은 '13.4~12월간 주택거래량 약 11만호 증가, 주택가격 1.8%p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0.13%p, 건설투자 0.44%p, 민간소비 0.22%p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건설임대 4.2만호 준공, 매입·전세임대 3.8만호 공급 등 총 8.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7개 지구(5,230호) 지정(12.19) 및 가좌지구 사업계획 승인(12.29)을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고, 서민·중산층 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하였다.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 25만 가구(16조원)에게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1~2% 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과도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희망임대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 897호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하우스푸어가 다시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실거주비를 월평균 60만원 경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14년 전망 및 정책 추진방향 >

[주택시장 전망]

올해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연구기관별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상승을 전망한 가운데,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1.0% 하락을 전망하였다.

■ 연구기관별 '14년 주택시장 전망

구분	국토연구원	건설 산업 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택	아파트
전국	1.3	-	1.1	1.5
수도권	1.5	1.0	1.1	1.7
지방	1.5 이하	△1.0	1.3 (평역시)	1.6 (평역시)

[입주예정 물량]

'14년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13년(39만6천호)보다 10.7% 증가한 43만8천호로 집계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년(23만5천호)보다 22.8% 증가한 28만9천호로 집계되었으며, 비아파트는 '13년(14만9천호)보다 7.0% 감소한 14만9천호로 집계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14년 입주예정 물량이 '13년(17만7천호)보다 2.4% 감소한 17만3천호로 집계되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13년(9만6천호)보다 3.1% 증가한 9만9천호가 입주될 예정으로,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아파트는 '13년(8만1천호)보다 9.0% 감소한 7만4천호 입주)

지방은 '14년 입주예정 물량이 '13년(21만8천호)보다 21.4% 증가한 26만5천호로 집계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13년(13만9천호)보다 36.3% 증가한 19만호가 입주될 예정이며, 비아파트는 '13년(7만9천호)보다 4.8% 감소한 7만5천호가 입주될 예정이다.

[14년 정책추진 방향]

국토부는 '14년에도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금년에도 공유형 모기지 2조원(1.5만 가구)을 포함하여 저리의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을 11조원 규모(최대 12만 가구)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 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하고 개편 ‘주거급여’(주택마우처)가 '14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고, ‘행복주택’도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2014.02.1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도심 유희 · 방치공간, '물의 정원'으로 바뀐다

광주시, 생태복원으로 생물 서식 · 시민 휴식 공간 제공

광주 도심 유희 공간이 물과 나무가 있는 소생태계로 조성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조류 · 곤충 등 소생물이 사는 '도심 내 유희공간 소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5곳 이상을 '물의 정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사업 대상지 발굴과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첫 조성지는 남구 주월동 장산초교 인근 유희부지로, 오는 4월 시작해 11월이면 1293㎡ 규모의 정원을 선보이게 된다. 예산은 환경부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신청해 광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2억 5000만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물의 정원'은 소생물 서식 공간과 시민 휴식 공간으로 나뉜다. 생물 서식 공간에는 빗물 등을 이용한 습지로 조성해 수생정화식물과 습지 주변 교목, 초목류를 심어 소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 이용 공간에는 정자(쉼터)와 발 담그는 곳 등을 설치해 소생물 생존 공간 복원과 저탄소 친환경 피서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곳은 인근 금당산 중앙공원과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사이에 위치해 녹색공간 두 곳을 연결하고,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을 자연 생태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 내 훼손되거나 유희 · 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장소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물의 정원 조감도

2014.02.14.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
오는 12월 16일까지 구 · 군으로 신청

울산시는 올 한 해 동안 관내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었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

호 구역,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에게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구·군은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1회분)는 납부되어야 한다.

울산시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군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울산건축사협회를 통해서도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 시행된 특별조치법 양성화 기간에 단독 3세대, 다세대 5세대, 다가구 3세대 등 총 11건을 신청 받았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두 사용승인 조치하였다.

2014.02.14.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사업계획 확정

하반기 착공, 이르면 2016년 하반기에 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14.2.5)를 거쳐 오류동 행복주택지구(87,685㎡, 890호)에 대한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오류동 지구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과 연결되어 대중교통 이용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젊은 세대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행복주택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적합지이다. 이곳에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주거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교류와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8월 지구지정 이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지역 맞춤형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먼저 오랫동안 철도로 단절되었던 북측의 오류1동과 남측 오류2동을 연결하여 지역 간 교류가 촉진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데크 상부를 통과하는 남·북간 보행동선을 계획하였으며, 양쪽에서 모두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데크 상부 및 북측 광장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와 그동안의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문화예술 공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이 들어서고, 사회적기업도 적극 유치하여 지역 사회와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동은 철도로 인한 소음·진동에 대비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진매트·방음벽 등이 설치되고 라멘구조로 건설되며, 주거평면은 대학생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6㎡에서 신혼부부 등 2~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46㎡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이 외에도 철도 소음·진동 영향저감 및 인공데크 경관개선, 보행로 연속성확보 등 제시된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류동 지구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행정절차(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선행하여, 먼저 지자체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주택, 인공데크 및 공공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설계 공사비는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약 1,260억 원으로 추정되고, 3.3㎡당 공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면 약 750만원~9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 공사비는 지자체의 의견 등을 반영함에 따라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공테크 및 공공시설 비용으로 3.3㎡당 약 300만 원 가량이 추가된 결과이다. 임대료는 건설원가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 입주자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014년 하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는 이르면 2016년 하반기 경에 시행하고, 2018년 상반기 사업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좌 및 오류동 등 시범지구와 더불어, 지자체 제안 사업 등 추가지구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4.02.16.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공공디자인 명품' 충남 조성 본격 추진

2014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추진...도시·농어촌 3개 분야 모집

충남도는 공공시설물에 마을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2014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총 8억 원을 투입해 도시지역과 농어촌마을 공공디자인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내 2곳을 대상으로 각각 1억 1000만 원이 지원되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1곳을 대상으로 1억 40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읍·면 단위 소규모 시골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정서와 스토리를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는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내 2곳을 선정해 각각 5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15개 시·군의 신청을 통해 후보지를 접수한 후 오는 20일까지 현지심사 및 서류심사를 실시해 최종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훼손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며 "특히 농어촌 공공디자인사업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3년까지 논산 연산면 청동리의 도자기 굽는 마을 풍경스케치사업 등 22곳에 72억 원을 투입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14.02.16.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서울시, 건설공사 계획부터 관리까지 체계화한 매뉴얼 발간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의 행정절차 등 주요내용 담은 '건설공사 매뉴얼' 발간

서울시는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관계법규 및 행정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책 한권만 보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매뉴얼'을 지자체 최초로 발간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각 실·국·본부 단위로 해당업무에 필요한 부분만 업무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왔으나,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을 묶어놓은 별도 업무지침서가 없어 실무자들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 부서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법령, 기준, 자치법규, 업무편람, 매뉴얼, 지침서 등 주요내용을 하나로 통합하고,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여 행정절차 등 주요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매뉴얼'을 발간했다.

건설공사 매뉴얼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1장은 건설공사 일반사항 △2장은 건설기술용역 업무 △3장은 건설공사 계획업무 △4장은 설계단계 업무 △5장은 공사단계 업무 △6장은 유지관리 업무 순으로 구성되었다. 부록 편에는 건설공사 관련 조례 및 각종 기준을 수록하여 매뉴얼을 실무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건설 분야 관련 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그 동안 건설공사 관련 실무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매뉴얼은 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추진절차 뿐만 아니라 각 건설공사 추진단계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업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설계 노력 및 오류 또는 공사 중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설계변경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매뉴얼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건설공사 관련 기업체 등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희방법

서울시 홈페이지(<http://infra.seoul.go.kr>) : 건설기술-자료실-지침/방침

또한, 올해 5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건설공사 관련 기준들의 잦은 변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에 연계구축하고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설물 준공 후 유지 관리하는 부서의 실무자까지 업무

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건설공사 매뉴얼』을 통해 사업계획단계부터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와 설계 및 공사시행 중에 발생하기 쉬운 오류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건설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2.17.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가 쉬워진다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 15%까지 확대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12.12.24)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하여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2014.02.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주택정비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서울시,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주택개량·신축 지원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된 곳에 최대 9,000만원(연 2% 금리)의 주택 신축 비용을, 완료된 곳과 정비계획이 아직 진행 중인 곳엔 최대 4,500만원(연 1.5% 금리)의 주택 개량비용을 용자 지원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곳은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등 총 17곳이고, 아직 계획수립 단계인 곳은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6곳이다.

〈주택개량비 최대 4,500만원 연 1.5%로 용자.. 어르신·중증장애인 0.5% 인하〉

우선, 주택개량 비용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용자해준다.

단,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용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주택신축비 연 2.0%로 용자, 무주택세대 협동조합 방식 신축시 0.5% 인하〉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1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용자된다.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 및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무주택 세대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금리를 0.5%p 인하해 1.5%로 하여 용자를 실시한다.

주택신축비용의 용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17곳이며 현재 계획 수립 중인 6곳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택 신축비용 용자가 가능하다.

〈개량·신축 시 필요한 정보 무료 안내 '주택개량상담실', '주택개량 상담 창구' 운영〉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을 '1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택개량 상담 창구에서는 그린파킹 지원 사업, 희망의 집고치기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맞춤형 집수리사업 및 다양한 집수리 방법 등을 상담하고 있다.

또, '주택개량상담실'과는 별개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된 구로구 운수동 등 총 17개 구역에 대해 구역별로 공공건축가, 자치구 추천을 받은 마을건축가 및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택개량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 주택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4.02.19.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활용될 기법과 모델 제시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도시재생네트워크 확대 발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 20일(목), 21일(금) 양일 간 선도 지역 공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도시재생R&D 연구성과 발표와 문화·경제·복지·도시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야 간 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LH오리사옥(분당 소재)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는 '함께하는 희망, 도시재생'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 복지, 경제·산업, 도시·건축 등 6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가 55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1일차(20일)에는 개막식과 도시재생 R&D 성과발표회가 열리며

도시재생 국내·외 사례와 도시재생기법 등을 중심으로 7년 4개월 동안의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한다.

특히, 창원·전주 지역자력형 테스트베드 연구에 대해 주거지·상가지역 재생기법,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등 테마별 발표를 비롯해 지역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발표하는 등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별 발제로 지난 12월 시행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지자체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추진을 돕기 위해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마련한 도시재생 표준조례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한다.

2일차(21일)에는 문화·예술, 전통시장, 사회적 경제·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도시 특성을 살린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와 기법들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도시재생네트워크 세미나와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개 연구기관의 도시재생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 공동 세미나가 세션별로 나누어 열린다.

한편, 20일(목)에는 6개 분야 4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재생네트워크 확대 발기인 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모인 발기인들은 그간의 우리도시가 물리적 시설 위주의 개발 및 정비로 인해 획일화되는 점을 진단하고, 도시재생은 도시 특색을 반영하고 문화·산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분야 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결의하였다.

향후, 도시재생네트워크는 오는 3월 문화관광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분야 간 릴레이 세미나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02.21.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환황해권 도시재생 성공모델 도입 추진

4일 공주시 도시재생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

충남도는 4일 공주시에 위치한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기반구축 방안 및 선도지역 공모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는 물론, 도 지식소그룹인 ‘도시재생활성화 연구회’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모임인 ‘소도시 연구회’, 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워크숍은 황희연 충북대 교수, 김정연·오명택 충남연 연구위원,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도시재생 전문가가 참여해 △충남도 읍·면·동 지역의 쇠퇴 실태와 특성분석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자력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13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정보공유를 위한 자리”라며 “도시재생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앞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은 도시 패러다임이 신도시 개발중심에서 기성시가지 재생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을 목표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은 대상 지역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으로 선정 시 사업유형에 따라 4년간 250억~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2014.02.04.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대전시 도시재생사업 사람장소 중심으로

10일 오후4시 시청세미나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위한 공청회' 개최

대전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전면철거 방식에서 사람·장소 중심의 사회·경제·문화를 중요시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10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정(2013.6.4.)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1월 13일에 실시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구상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구상서를 제출 받아 4월에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9개소 총 11개소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지역은 2014~2017년까지 총 4년간 도시경제기반형 250억 원, 근린재생형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구청 및 관계 부서로부터 1월에 사업구상서를 제출 받아,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덕구 대전제1,2산업단지 복합지원센터건립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1개소와

동구 정동 마음으로 거닐다 사업, 중구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사업, 대덕구 읍내동 회덕현 효자 행복마을 사업의 근린재생형 3개소로 총 4개소를 응모 대상 사업지로 선정할 바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와 2월 중에는 대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달 14일 국토교통부에 사업구상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역할과 참여 등 도시재생선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소·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로 구) 충남도청 소재 대전시민대학 강좌에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개설하여 3월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선진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시민대학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대전 시민대학 홈페이지에서 2월 10일부터 강좌 접수가 가능하다.

2014.02.10.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13일 창신·송인지역 도시재생 선도구역 신청 위한 공청회

서울시 시의회 의견청취 거쳐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 예정

서울시는 창신·송인지역 도시재생선도구역 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2월 13일(목) 15시 종로구 구민회관(종로구 창신동 222-8번지 소재)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지는 창신·송인 뉴타운 해제지 중 창신1동 남측을 제외한 종로구 창신1동 북측, 창신2·3동, 송인1동 일대이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서울시에서 창신·송인지역을 국가지원의 도



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창신·송인 도시재생 선도구역 구상(안)’에 대한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의 주제발표, 전문가·주민대표의 토론이 있는 후 주민질의 응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청회에 앞서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공청회 이후에 서울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4.3.14까지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4.02.11.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대전시, 시민 주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시민공모 사업설명회 20일, 중구청 대강당...접수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시민 모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을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올해 실시하는 시민 공모사업은 대전시에 소재지나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 대학생, 아마추어 동호인, 개인 등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주제를 제한하지 않는 자유공모와 원도심 투어, 아트프리마켓 등의 기획공모로, 공모 기간은 2월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로 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대전 문화재단에서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와 같이 원도심의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했으며, 자유공모의 경우에도 거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장소도 원도심의 지정장소와 자

유 임의장소로 하고 행사일정도 금, 토, 일로 집중하여 운영한다.

공모분야는 △대전 몽마르트, 문화의밤, 마임극(판토, 악기), 비보이배틀, 공연, 전시, 문화이벤트행사, 전통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원도심 투어, 골목걷기 등 시민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획 이벤트분야 △그 밖의 아트프리마켓, 프린지 축제 등 기획 분야 등으로 원도심지역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 성격 등에 따라 지원시기와 규모 등을 차별화·현실화하고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분야별 회당 5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회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한편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중구청 대강당에서 시민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014.02.18.
..... 대전광역시 도시활성화기획단

뉴타운을 넘어 지역발전 연계한 ‘도시주거재생’으로

도시주거재생을 위해 1조 원 투자, 서울형 재생기구 설치

서울시가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26일(수)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 투자’ 및 ‘서울형 재생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낙후지역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던 뉴타운·재개발을 넘어, 물리적 정비와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개념의 도시주거재생을 통해 100년 후에도 서울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미래 비전의 기본 방향이다. 지난 2년간 뉴타운 수습방안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 뜻대로 많은 구역이 추진 또는 해제 진로를 결정하는 등 주민 갈등 해소에 노력해 왔지만, 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상을 위한 도시주거재생에는 지원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생활권 단위 주거지 종합 정비·보전·관리로 삶의 질 및 지역 가치 상승〉

면 개념의 생활권 단위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보전·관리, 사람·장소 중심의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뉴타운·재개발이 점적인 구역별 사업추진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체성 보전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폭넓은 개념의 주거지 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전인프라, 공원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도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을 진단해 이뤄진다. 주거환경 진단은 주거환경의 안전성, 주거환경의 편리성, 주거생활의 쾌적성, 공동체의 지속성 등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종합적·통합적 도시주거재생이 이뤄지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며 지역문제 및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 사업은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 추진은 신속히 되도록 지원 강화〉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지정 후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도, 호수 밀도 등의 물리적 요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분별한 정비 사업으로 발생된 찬반갈등과 장기간 사업 지연, 비용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진이 결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밀도를 관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 장소중심의 맞춤형 재생사업을 위해 투자〉

서울시는 도시주거재생을 위해 4개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주택사업·도시개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재원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외·낙후지역 정비 △성곽마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의 보전 △전통시장 관리와 일자리 육성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지원 투자된다.

〈개발·정비위주 분야별 조직 '서울형 재생기구'로 전환, 일관된 도시재생 추진〉

개발·정비 위주의 각 분야별 기존 시 조직도 도시재생이라는 추진 목표가 일관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형 재생기구'로 전환 설치한다. 재생 기구는 계획, 관리, 시행 등을 총괄하고, 타 분야와의 유기적 연계역할을 통해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환경·경제·사회적 통합재생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시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지원센터를 활용,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장은 “소외·낙후된 지역을 정비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서울다운 도시재생을 이루며, 물리·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실현하는 것이 서울시의 도시주거재생 비전”이라며 “시민 삶과 서울의 미래를 담는 통합과 공유의 재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2.26.

..... 서울시 주택재생과

이제는 옥외광고물도 관광 상품!

안행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 입법 예고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되고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는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되어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 미국 라스베이거스 : 한시적 조경용 광고 허용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었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련 산업진흥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의 날”이 지정·운영된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강화된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 또는 교차하여 단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

동광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 이용을 정지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사람만이 교육을 받던 것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시작하여 지난 52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법률 전체 구성이나 용어·내용 등에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명이「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한편, 목적도 관련 산업의 진흥이 추가되었다. 또한, 5개의 장으로 재분류되었고 일본식 용어 등이 개정되었으며 법령 용어의 정의도 구체화되어 법령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로 구분하여, 어떤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고 기금 부과 대상인지 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2014.02.18.

..... 안전행정부 도시디자인과

서울시, 여성안전아파트 등 ‘여성 안전마을’ 18곳 운영

서울시는 올해도 마을 주민의 힘으로 조성하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18여 곳에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여성 안전마을’은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주민, NGO, 마을 내 경찰, 구청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 주민들이 직접 파수꾼이 되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도 ‘여성 안전마을’은 마을 주민활동과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CEPTED등을 적용한 여성안전 환경을 조성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 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 신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여성안전마을 지원 사업 분야는 △마을 안전망 구축사업 △여성 안전 아파트 운영 △여성안심 귀갓길·골목길 조성 △마을지킴이 양성 활동 △주민 순찰대 운영 등이다.

이중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여성안전아파트’ 사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성범죄가 아파트 옥상, 계단 등에서 일어나는 점을 착안, 노후 되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여성 취약지역을 모니터링 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주민교육, 순찰 등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진되는 ‘여성 안전마을’ 18곳은 한 단체에서 1천만 원 이내, 총 1억 8천만 원이 지원되며 여성단체, 여성 폭력 관련 단체, 성·가정폭력 상담소 등 여성 안전마을 사업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단체(마을 주민 5인 포함)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4.02.24.

..... 서울특별시 가족정책담당관

광주시,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공모 선정

광주폴리 주변 환경 개선·3차폴리에 국비 3억 원 확보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선정 공모’에서 광주폴리 주변 환경 개선 및 3차 폴리를 통한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최종 심사결과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범사업으로 1차 폴리 주변 환경을 개선해 폴리 둘레길을 조성,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고 도심 폐허나 유휴지 등에 3차 폴리를 설치하는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폴리 둘레길은 1차 광주폴리 10개를 연결하는 2.2km구간으로, 건축과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광주지역의 대표 문화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10월 안전행정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된 문화전당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충장로, 황금로 등 옛 도심 재생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지구 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518아카이브, 문화전당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연관 사업이 많아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 대표,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이용, 건축물·시설물의 경관관리 미흡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국토경관은 열악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국토품격을 높여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6개 자치단체가 응모한 결과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남 공주시, 경북 김천시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2014.02.24.

.....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서울시, 마을에서 활동 할 조경리더 309명 양성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자 살고 있는 동네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이웃 주민들에게도 녹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눌 '조경리더' 309명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난 지난해 최초 실시한 시민조경아카데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추가적으로 2차 시민조경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수강생 222명 중 70%인 15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시민조경아카데미에서 배출한 수료생 간 원우회를 구성하여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동네 가꾸기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활동 영역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조경아카데미는 조경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과 전공 대학생, 도시농업 등 시민 활동가, 귀농예정자, 은퇴자 등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참여자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2차 시민조경아카데미는 겨울철 실내(베란다 등) 정원 가꾸기 등 실내 정원 분야를 중점 개설하여 관련분야 원예·조경학과 교수 및 박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원, 가든 디자이너, 식물 전문가 등 조경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 위주로 강의가 진행됐다.

올해에는 시민조경아카데미를 통한 인문학 강의에 그치지 않고 실무능력 배양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조경 리더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심화과정을 준비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이 생활공간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발적 녹색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오혜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민이 조경과 정원, 공원을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생활공간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발적 녹색문화가 일상적으로 활간되길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녹색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4.02.25.

..... 서울특별시 조경과

부산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부산시, 주민제안형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본격 추진

부산시는 지난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과 행정의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추진기반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는 마을만들기 통합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구축 △마을만들기 아카데미운영 △마을공동체·기업 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사기진작·화합도모 등 17개 지원시책 16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6억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자유공모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지정공모(자부담10%) 2가지로 나뉘어 추진된다. 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어려움을 해소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 마을컨설팅단을 구성·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건강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



할 계획이다. 진단, 처방, 치유, 관리 4단계로 추진되며 마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을건강 로드맵을 도입해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기반형성과 함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마을건강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라면서, “마을주민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2014년 마을만들기 사업 통합추진을 위해 2월 26일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2013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2014년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자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할 예정이다.

2014.02.25.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습 제시 △공무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토론을 실시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시·군 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날 토론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홍규 도 건축도시과장은 “올 1년간 추진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건축법 등 관련법 검토에 철저를 기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4.02.26.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업무처리 만전

26일 건축행정진실화 추진 시·군 담당 공무원 영상회의

충남도는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30여명을 화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2014년 건축행정진실화 추진계획 및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처리 가이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4년 건축행정진실화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올해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건축행정진실화 계획은 △정부합동평가 등 착실한 준비로 각종 평가 우수 목표 △고품질의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지향 △위반·방치건축물 관리 철저로 일하는 모

‘디자인을 통한 안전한 부산 만들기’ 부산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부산시, 2. 2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시범사업 추진 최종용역보고회 개최

부산시는 2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¹ 시범사업의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하 셉테드)사업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주민 불안요소를 분석,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¹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마을에 안전감시체제를 구축해 지능화·다양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를 디자인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새로운 시각의 범죄예방 전략사업이다.

올해는 서구 남부민2동, 북구 구포2동, 사하구 감천2동, 사상구 모라1동을 시범 선정해 기존 CCTV를 활용한 안심구역 설정, 안심구역으로 인도하는 안심선 표시, 대문을 활용한 조명등 및 사각지대 없는 반사경 설치, 학교게시판을 통한 소통강화 및 골목조도 개선, 세대 간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쉼터 설치 등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기계적 감시 외에 주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융화돼 주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이 범죄 신고시 장소를 설명하기 어려운 구역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죄신고구역표지판 1,625개를 부산 전역에 설치를 완료했다.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시민에게는 안심감을 높여주는 이중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 셉테드 사업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인구수, 생활수준, 외국인 거주·독거노인 현황 및 주민간의 친숙도 등 사회 인구학적 범죄유발환경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당지역 맞춤형 셉테드 사업을 위해 범죄현황 조사, 지역현황 조사, 주민의견 및 설문, 검찰·경찰·교육청·구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다각적 접근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부산의 체계적 셉테드 도입이 공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최소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4.02.26.
..... 부산광역시 도시경관담당실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중형(60~85㎡)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합리화 / 임대주택건설용지 신축적 조정 가능 /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 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현행	개정
대형(85㎡초과): 감정가격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중형(60~85㎡): 감정가격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써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 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

현행			개정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20%)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 이상	10%이상	5%이하 추가 가능 5%이하 추가 가능	25% 이상	10%이상	5% 이하
40%이상			40%이상 (20% 범위 내 조정가능)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한,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에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완화된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체계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 관행 개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 준공 및 공용 개시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 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2014.02.27.
국토해양부 신도시택지개발과

'아산 환영의 길' 등 공공디자인 공모 선정

2014 공공디자인 3개 분야 5곳 선정...총 4억 원 지원

충남도는 27일 공공시설물에 마을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공공디자인을 도입해 명품디자인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4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전체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2014 공공디자인 공모에서 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분야는 아산시와 서천군이 선정됐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분야는 금산군이 선정됐다.

또 농어촌마을 공공디자인 사업 중 희망마을 연계사업 분야는 서산시, 일반시골마을 분야는 부여군이 최종 선정돼 3개 분야에 총 5개 시·군이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도내 10개 시·군 11곳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도시 보다는 소규모 농어촌마을 분야의 신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에 각각 도비 1억1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에 7000만 원, 농어촌마을공공디자인사업에 5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은 오는 9월까지 시·군 사업비 확보 및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 시·군 등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설계를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모신청 결과 소규모 농어촌 마을 분야의 경쟁률이 높아 농어촌 주민의 마을경관 및 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내년도 사업부터는 농어촌마을 공공디자인 분야의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4.02.27.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울산시, 걷고 싶은 보행도시 조성

'울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열람 공고-보행 안전성, 편리성, 활성화 등 보행 정책 방향 제시

울산시는 '걷고 싶은 보행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밑그림을 그려온 '울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월 27일 열람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행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의 보행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보행 분담률은 2014년 26.44%에서 2018년 26.6%, 보행만족도(기준 5점 만점)는 2014년 3.02점에서 2018년 3.21점으로 각각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방향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보행 교통사고 감소 및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고, 보행환경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행 안전성 확보 △편리성 증진 △보행 활성화 등 3가지로 짜였다.

총 사업비는 257억 원(보행안전성 26억 원, 편리성 51억 5,000만 원, 보행활성화 179억 5,000만 원) 등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횡단보도 확충, 보도 단절구간의 보행로의 연속성 확보,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 시간 조정, 보행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보행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보행 편리성 증진 부문에서는 걷기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방지대책, 보행 장애물로 작용하는 가로시설물을 통합하고,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를 위해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도심 등 보행자 집중지역에 대한 보행자 안내 표지판 확충,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육교·지하보도 등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보행입체화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행 활성화 부문을 보면 보행 친화적 공간 확대를 위하여 단순히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에서 탈피, 지구(지역)를 대상으로 주변 교통 환경과 연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보행자길 조성, 어린이 쉼터 조성 등을 고려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속추진, 보행우선의 교통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보행문화 선진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2014년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안행부)'에 선정된 '중구 원도심(학생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지구'를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2014.02.27.

.....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

대구광역시, 아산시에도 행복주택 공급된다

대구혁신도시에 1,100호, 대구테크노산단에 1,020호, 아산신도시에 900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구광역시가 제안한 행복주택 후보지 중 수요가 충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2개 지구에 행복주택 2,120호와 아산시와 협의가 완료된 아산배방신도시에 행복주택 900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우선, 대구신서혁신도시에 행복주택 약 1,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혁신도시는 한국감정원 등 총 11개 기관이 이전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산학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계획인구 23천여 명인 신도시이다.

대구혁신도시 내 행복주택부지는 지하철 1호선 안심역이 1.4km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8년 개통예정인 사북역이 100m 거리에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영남대학교(4.6km), 경산대학교(5.3km), 경일대학교(5.8km) 등 다수의 대학교 및 경산일반산업단지(6.4km)에

서도 접근성이 양호하여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대구테크노산단지에 행복주택 약 1,0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계획인구 50천명 수준인 대구 테크노산단지는 73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 융합기술대학원, 계명대 지능형자동차대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시설이 입주할 예정이고, 인근에 17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달성 1·2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형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아울러, 아산 신도시에 행복주택 약 9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입지 예정 부지는 약 1km 거리에 KTX 천안아산역과 수도권연계 전철 아산역이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인근에 탕정디스플레이 등 10개 고용시설에서 65천명이 근무하고 있고 선문대, 나사렛대 등 대학에서의 접근성 또한 양호하여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LH는 대구혁신도시, 테크노산단지, 아산신도시 내 행복주택은 금년 상반기에 주택사업승인을 받고 금년 말 착공하여 '1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등 7개 지자체에서 제안한 행복주택 후보지 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13개소에 약 9,930호이다.

■ 지자체 제안지구 등으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행복주택 후보지

구분	내용	호수(잠정)		사업시행자 (잠정)
		계		
계			9,930	
부산 광역시	동래역 철도부지	1,600	400	부산도시공사
	서구 도심재생용지		1,200	부산도시공사
	주안역 철도부지	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광역시	연수역 철도부지+주차장부지	2,450	600	인천도시공사
	동인천역 철도부지+도심재생용지		250	인천도시공사
	남구 도심재생용지	1,400	LH	
대구 광역시	신서혁신도시	2,120	1,100	LH
	테크노산단		1,020	LH
광주 광역시	광주KTX역 철도부지	1,200	700	광주도시공사
	북구 도심재생용지		500	광주도시공사
경기 고양시	삼송 택지지구	1,360	1,360	LH
경기 포천시	미니복합타운	300	300	포천시 등
충남 아산시	아산배방지구	900	900	LH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부지현황과 수요를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선별·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27.

..... 국토해양부 행복주택정책과

네덜란드 제4차 건축정책(2005~2008)

김영현_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해 온 국가이다. 1991년에 “Space for Architecture”라는 이름으로 건축정책 문서가 공식 발표 된 이후 20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건축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중 제4차 건축정책은 문화정책인 벨베데레 정책을 통합시킴으로서 건축이 내포하는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내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화융성”이다.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융성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건축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사례를 통해 건축문화가 무엇이고, 건축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였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정책내용 구성

네덜란드 제4차 정책보고서인 ‘Spatial Planning and Culture’에는 건축정책과 벨베데레 정책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건축을 문화적 유산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건축 및 문화정책의 통합적 정책 실현을 위한 선도요인들로서 디자인 기초조사 수행과 발주업무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 및 문화의 통합적 정책 실행을 위해 선도 시범사업¹, 관련 법률 재·개정, 예산지원 프로그램과 건축 관련 정보 확산을 계획하였으며, 정책 실행 주체로서 일반적으로 다루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유관단체에 대한 역할과 더불어 벨베데레 정책 실행 업무와 관련된 조직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중앙부처 예산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¹ 선도사업 중 일부는 제3차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주요내용인 9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축정책과 문화정책의 통합

건축정책(Architecture policy)

제1차 건축정책(Sapce for Architecture 1991~1994) 1990년대 초반에 수립된 1차 건축정책은 2개 부처(①보건·복지·문화부(Ministries of Health, Welfare & Cultural Affiars, 현재의 Education, Culture & Science), ②주택·공간계획·환경부(Housing, Spatial Planning & the Environment, VROM))가 참여하였으며, 건축 프로젝트의 커미셔닝 및 전반적인 건축 수준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건축정책에 의해 NAI(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와 네덜란드 건축기금(Netherlands Architecture Fund)이 설립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역건축센터의 형성과 업무지원이 이루어졌다.

제2차 건축정책(Architecture of Space 1996~1999) 2차 건축정책은 총 4개 부처(①교육·문화·과학부(Ministries of Education, Culture & Science, OCW), ②주택·공간계획·환경부(Housing, Spatial Planning & the Environment, VROM), ③농·수산업부(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 Fisheries, LNV 현재의 Agriculture, Nature & Food Quality), ④교통·수자원관리부(Transport, Public Works & Water Management, V&W))가 참여하였으며, 정책 범위를 도시 개발, 조경, 인프라를 포함시킴으로서 건축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제3차 건축정책(Shaping the Netherlands 2001~2004) 3차 건축정책은 기존 정책내용을 발전시켰으며,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9개 주요사업들을 설정하였다. 3차 건축정책에 참여한 각 중앙부처가 최소 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건축가위원회(Office of Chief Government Architect)가 계획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진행방향을 자문·관리하였다.

문화정책으로서의 벨베데레 정책(Belvedere policy)

네덜란드는 과거의 급속적인 개발에 의해 등한시 되었던 기존 건조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물리적 대상 위주의 접근보다는 지역 위주의 접근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건축정책에도 이를 반영하였으며, 제2차 건축정책에 참여했던 교육·문화과학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농수산업부, 교통·수리관리부가 네덜란드 보존 및 고고학적 유산 서비스 관련 부서와 협력함으로써 문화정책으로서의 벨베

데레 정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벨베데레 정책의 핵심전략은 '개발을 통한 보존'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을 개발과 연계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벨베데레 정책 공식문서 (Belvedere Policy Document 2000-2009)를 통해 정부는 도시 공간계획 내 문화적 역사 요소들의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정책 실현을 위해 선행해야 할 사항

개별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과정에 문화적 가치의 보존 및 활용을 강조하였다. 문화적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디자인 수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들이 이러한 사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간계획에 있어 문화적 요소가 성공적으로 발현되기 위해 다음 2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디자인 기초조사 수행(Design studies)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디자인 요소들을 도출해야 한다. 디자인 조사는 현재의 제한된 공간들을 통해 도시 및 비도시 환경을 재편하는 다양한 구상들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과거와 새로운 것, 문화적 통일성, 현대건축 고려사안들이 통합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사업발주 업무 개선 (Commissioning practice)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디자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공공 및 민간 발주자들이다. 특히 건설규모가 대규모화, 복잡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설계자와 발주자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여부는 발주자가 사업목표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사업발주업무 관련 개선은 네덜란드 건축정책에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선정하고 있다.

건축정책 실행계획 주요 내용

건축정책과 문화정책의 통합을 위한 주요정책사업으로 도시 및 비도시, 교통,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 ①선도사업 추진, ②효과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법률 검토, ③예산지원 강화 ④건축 관련 정보 확산 등 4개 부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앞서 강조한 디자인 기초조사와 함께 다분야 7개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사업 목표

-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사문화, 건축 및 도시계획, 조경 분야의 통합적인 접근과 협조
- 다양한 부처간 협조적 업무 수행체계 구축·운영
- 사업 추진간 다양한 전문가 의견협의를 위한 커미셔너를 지정하고, 통합적인 개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문화 및 역사적 건축 현황, 도시계획 실태 등 디자인 기초조사 수행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 및 문화유산 관련 단체의 전문가 활용
- 네덜란드 공간계획 및 문화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제적 입지 및 협조 조성

선도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중에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사업별 정부의 역할, 사업규모, 사업단계, 디자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레이크스미술관 리모델링, The New Rijksmuseum)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대규모 건물의 리모델링
- (네덜란드 워터라인 프로젝트, The New Holland Water Line)ダイナミック한 지형 내 위치한 역사적 방어시설의 보존 및 개발
- (도로 디자인 개선, Design of motorway routes and their surroundings) 도로 품질과 주변환경의 개선

- (비즈니스 공원 건축, Business park architecture) 공원 배치, 조경 및 건물의 품질 개선
- (발주체계 개선, Improvement of professional commissioning practices) 새로운 사업 실행에 있어 공간 품질 개선
- (외교관 건물 개선, Embassy buildings) 네덜란드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외교관 건물의 디자인 개선
- (기존 군사방어 시설의 기능 변화, Change of function of sites and structures formerly used for Defence purposes) 문화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군사방어 진지 및 구조물을 새로운 사용자 측면에서 기능 변화·개선
- (아프슬라워트다이크, Afsluitdijk) 75년간의 엔지니어링 기술 기념
- (로마제국 요새 보존, Limes) 로마제국 경계지역에 위치했던 요새에 대한 디자인 개선
- (랜드스타드 디자인, Design in the Green Heart) 네덜란드 서쪽의 광역 도시권의 중심부 디자인
- (전후 지역의 도시재생, Post-war districts) 문화적 가치들을 강조한 도시 재생 추진
- (공간 디자인 요소로서의 물 활용, Water as element in spatial design) 물 관련 사안들을 디자인을 통해 해결
- (세계유산 보존, World heritage)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적 유산들의 보존 및 개발

법률 검토 및 예산지원 강화

통합적인 건축정책 및 벨베데레 정책 실현을 위해 건축사법, 환경영향평가체계 등 일부 법률을 검토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적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해 ISV(도시 재생과 지역정부의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투자 기금)에 추가적인 목표와 기금들을 설정하고, 네덜란드 지형 및 조경 보존을 위해 ILG(비도시 개발과 지역정부의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투자 기금)의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참여주체간 역할

건축 관련 정보 확산

건축정책 및 문화정책의 진흥 및 통합을 위해 전문가 및 일반대중의 건축 관련 지식 습득, 관련 정보교환 및 개발을 위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국제적 교류 등에 대해 폭넓게 투자하였다.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네덜란드 건축정책은 7개 중앙부처 교육·문화·과학부(Ministries of Education, Culture & Science, OCW), 주택·공간계획·환경부(Housing, Spatial Planning & the Environment, VROM), 농업·자연·식품관리부(Agriculture, Nature & Food Quality, LNV), 교통·수자원관리부(Transport, Public Works & Water Management, V&W), 경제부(Economic Affairs, EZ), 외교부(Foreign Affairs, BuZa), 국방부(Defence)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부처간의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선도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투자 프로그램에 문화적 목표들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정부가 공간계획 수립 단계에서 디자인 품질 및 문화적 역사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사업은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역사·문화적 정보 인프라 구축, 지형 및 조경 계획, 문화정책(벨베데레) 프로젝트 조직의 지원업무 등이 있다.

국가건축가와 정부 자문 이사회(Chief Government Architect and Board of Government Advisors)

국가건축가의 권한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공간계획, 인프라 및 지형 개발, 각종 규율 검토, 건축교육, 건축정책 코디네이팅, 건축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도모 등에 대해 권위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정부부처들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건축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물,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문화유산, 시각 예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²

² 국내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지역건축정책위원회가 있다.

2004년 이후로 국가건축가는 정부 자문 이사회의 의장으로 역임되었으며, 정부 자문 이사회는 유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정 및 지형, 문화적 유산, 인프라에 대한 정부 자문위원은 각각 농업·자연·식품관리부(LNV), 교육·문화·과학부(OCW)와 교통·물관리부(V&W)의 정부 관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자문위원은 소속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 관련 정책 사안들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며, 정부를 위해 디자인 및 건축 정책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하며, 네덜란드 건축정책으로 수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축과 문화 유산 보존 관련 단체(Architecture and heritage organisations)

건축 및 문화 유산 보존 관련 단체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 계획가, 건설가, 프로젝트 개발자, 디자인 전문가, 문화적 역사가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네덜란드 건축과 벨베데레 정책 실현을 위해 각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위상과 권한이 있는 단체들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지방정부 위계에서는 다양한 비도시, 지역특화 센터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예산지원 계획

정부의 예산 지원은 건축 단체 및 벨베데레 정책 실현을 위한 일반적인 예산 부문과 본 실행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부문으로 구분된다.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와 교육·문화·과학부(OCW)는 건축단체 지원을 위해 2005년 기준 매년 1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559억 8,065만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4,500만 유로(한화 약 668억 4,885만 원)는 NAI를 위해, 3,300만 유로(한화 약 490억 2,249만 원)는 네덜란드 건축 기금(Netherlands Architecture Fund)을 위해 소요하고 있다. 또한, 2005-2009년간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와 교육·문화·과학부(OCW)는 ISV(도시 재생과 지역정부의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투자 기금)의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연간 400만 유로(한화 약 59억 4,212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